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 2017 January/February Vol.84

민족화해

01 2017
January/February
02 Vol.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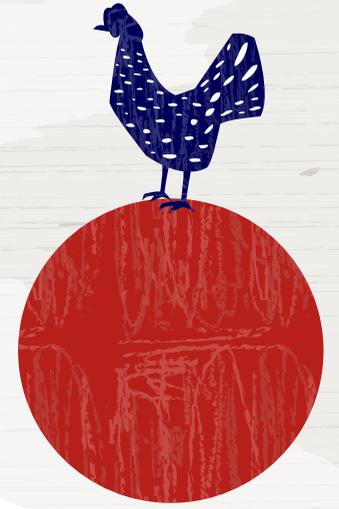
권두인터뷰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신년대담

2017년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를 내다본다

신년대담 2017년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를 내다본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Contents

2017 January / February_Vol.84

민족화해 2017년 01 + 02월호(격월간, 통권 84호)
 등록번호 종로, 마00069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발행인 홍사덕
 편집인 공용철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김석진, 김성경, 박인휘, 신석호, 조남훈, 전영선
 편집장 박지웅
 편집부 이현희, 염규현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rc.or.kr
 디자인 및 제작 (주)늘품플러스 02.2275.5326

02 여는 글

04 권두인터뷰_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남북관계 위기에도 대화와 인도적 지원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12 기획연재_ 통일로 가는 길 ⑫

환각지 현상에서 벗어나 단일국가 방식의 통일담론 극복해야 | 최완규

16 신년대담_ 2017년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를 내다본다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서 현실적인 대북·대외정책 필요해

24 특집_ 2017년,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

- 국민 의식 속의 통일, 부풀려진 '남남갈등' | 이상신
- 역사 속의 통일, 포용·통합의 과정으로 이를 수 있어 | 정창현
- 북핵과 통일, 한반도 비핵화는 통일의 전제조건 | 김태우

36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_ 박창일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

평범한 이들이 만드는 평화와 통일을 꿈꿉니다

40 기획_ 트럼프와 시진핑, 그리고 한반도

- '견제와 균형' 갖춘 미국 권력, 트럼프 공포보다 한미관계 재도약을 | 왕선택
- '위대한 부흥' 꿈꾸는 중국, 독자적 대 한반도 정책 고민할 것 | 김흥규
-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로 미중 갈등의 한반도 영향 최소화해야 | 신상진



52 문화모니터_ 사진으로 북한 읽기 ③

북한 선전의 진화, 드론과 프롬프터 | 변영욱

54 문화모니터_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⑧

연하우표를 통해 바라본 남북, 새해 축하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아 | 이상현

56 문화탐방_ 동북아문화교류 공동학술회의

뿌리가 '같은' 나무, 문화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다 | 1020통일공감기자단

60 현장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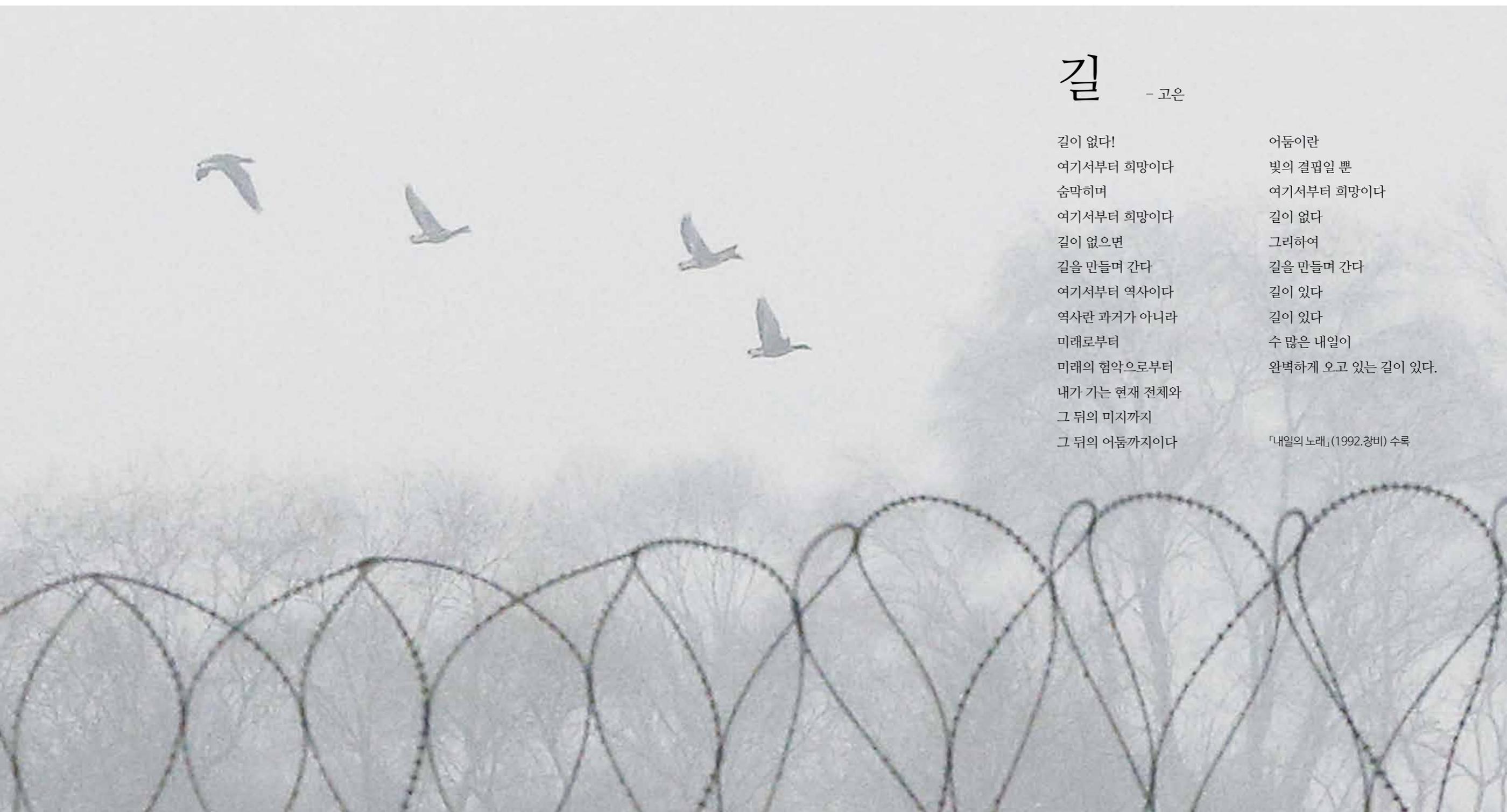
- 제4차 통일공감대화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 통일공감포럼 조찬특강
흡수통일론 대신 점진적·평화적 통일방안 재확인해야
- 제14회 민족화해상 시상
'인명진 목사', '사단법인 평화3000' 수상

68 민족화해 네트워크

70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72 독자 의견





길

- 고은

길이 없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숨막히며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 역사이다
 역사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미래의 협약으로부터
 내가 가는 현재 전체와
 그 뒤의 미지까지
 그 뒤의 어둠까지이다

어둠이란
 빛의 결핍일 뿐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다
 그리하여
 길을 만들며 간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수 많은 내일이
 완벽하게 오고 있는 길이 있다.

「내일의 노래」(1992.창비) 수록

권두인터뷰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남북관계 위기에도 대화와 인도적 지원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대담 **공용철** <민족화해> 편집인·KBS PD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은 다방면에 도량이 깊은 수행자이자 운동가이다. '즉문즉설'을 하면서 수많은 대중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행복안내자이며, 환경,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천하는 운동가이다. 스님의 '즉문즉설'은 행복한 삶과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와 같다. 20여년 동안 통일운동을 해 온 스님이 바라보는 남북관계와 통일준비에 대한 안내서는 무엇일까. '즉문즉설'로 2017년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통일의 길을 들어 봤다.

정리 **이현희** 민화협 정책홍보팀장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스님은 우리 사회 힐링 멘토로 불리시는데, 최근 관심을 가지고 멘토 역할을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요?

A 우리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행복한 대화'를 주제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하려면 첫째, 자기 견해를 너무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해도 답답한 마음이 풀립니다. 둘째는 평화롭게, 공정하게, 기본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면 불만이 많이 생기고, 전쟁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경쟁이 불공정해도 불

만이 생깁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두 가지가 행복도를 높이는 요소라고 봅니다.

Q 평화재단, 한국 JTS, 좋은벗들, 에코붓다 등의 단체를 설립하시고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동을 관통하여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요?

A 우리 사회를 사람이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자는 것인데,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것이고, 인류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밥은 먹고 살지만 견해차이나 이익관계로 싸우니 평화도 중요합니다. 개인으로는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환경을 위해

북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도움이 필요하니 돕는 겁니다.

사람들은 북한 안에 있으니 도우면 안 되고,

밖에 있으니 또 도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관점입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보니 돕자, 돕지 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보편적 관점에서 보고 때로는 지원하고 때로는 비판을 할 뿐입니다.

‘에코붓다’, 빈곤을 위해 ‘JTS’, 평화를 위해 ‘평화 재단’, 인권을 위해서는 ‘좋은벗들’ 등의 단체를 설립하여 좋은 사회 만들기에 작은 기여라도 하려 합니다.

“

차별이나 특혜가 아닌 보편적 관점에서 북한사람 도와야

”

Q 오늘은 남북관계 관련해서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은 북한의 생존권, 남북협력,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많았고, 보수진영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스님께서는 두 가지를 모두 하고 계신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보편적인 입장에서 할 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병이 들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중국으로 넘어와서 난민이 되었으면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안에서의 인권상황이 열악합니다. 생존권도 문제지만 믿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많은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는 정착의 어려움이 있기에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도움이 필요하니 돕는 겁

니다. 사람들은 북한 안에 있으니 도우면 안 되고, 밖에 있으니 또 도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관점입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보니 돕자, 돕지 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보편적 관점에서 보고 때로는 지원하고 때로는 비판을 할 뿐입니다.

Q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은 체제의 억압성 문제를 부각하면서 변화시키려는 욕구가 강했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인권문제를 작게 여기는 등 자기의 시선에서 일하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대북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니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하면 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니 인권개선을 위해 일하는 단체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인권개선을 이야기하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라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왜 그런 요구를 합니까. 인도지원단체도 인권단체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것도 자유이고,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자유이니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Q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모니터링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제대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느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도적 지원을 확장하는데 큰 장애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먼저 인도적 위기 상황인가를 봐야 합니다. 북한 정부의 행동이 맘에 든다 안 든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식량, 의약품, 교육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인도적 상황이 열악한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종교, 민족, 정권과 관계없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 부딪혔으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위기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이 100%는 아니더라도 70%라도 가면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전혀 안가고,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면 중단해야죠. 또 북한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는 반드시 모니터링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에 너무 정치적 관점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북한 정부도 유엔 등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은 받으면서 같은 민족인 우리의 지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Q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탈북민에 대해서도 통일외교부의 마중물이라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지원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외면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A 탈북민을 지나치게 도와도 안 되고, 외면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탈북민은 북한에서 살다가 이주해 왔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도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줄 테니 남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지 보편적 지원이 아닙니다. 적대 관계에서 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통일준비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남아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조선족은 시민권을 안 주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바로 시민권을 주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혜택입니다. 또 정착금이 너무 과도하면, 남한의 가난한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것은 남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어디에서 왔든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을 특별히 더 도와야 한다면,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도와야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 약간 더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러나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어요.

Q 우리 사회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북한을 보는 다른 시선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남한 사회를 어떻게 볼지도 사람마다 견해가 다

르는데,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 정치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고통 받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닙니다.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집단인 동시에 유일한 통일의 대상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만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현실만 이야기하고 미래를 보지 않으면 비전과 희망이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되,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향해서 현실을 한발 한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
주체적 관점에서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
”

Q 2016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의해 개성공단 폐쇄되는 등 교류협력의 모멘텀은 사라지고 군사안보적 대치만 강화된 한해였는데 2017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보편적 관점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북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하면 되고, 그런 중에도 대화가 있어야 군사적 긴장을 줄일 수 있고, 그런 중에도 대화가 있어야 군사적 긴



북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하면 되고, 그런 중에도 대화가 있어야 군사적 긴장을 줄일 수 있으니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화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장을 줄일 수 있으니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결이 있다고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중단시켜도 안 되고, 대화와 지원을 한다고 군사적 위협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대화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Q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간 파워 게임에서 남북이 종속변수가 되면서 평가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지금 한반도의 갈등구조는 삼중으로 얽여 있어요. 크게는 미중이 경쟁하면서 우리를 밖에서 조여오고 있고, 한반도 안에는 남북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남한 안에서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두고 서로 갈등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중첩된 구조라 사실은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해결의 관점으로 볼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남갈등을 줄이는 일입니다. 진보가 남북관계에서 10을 하자고 하고 보수는 3을 하자고 하면, 5정도에서 합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실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진보정부 시기에 10을 갔다가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3으로 후퇴하면 남북한의 신뢰도 깨지고 서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진보정부는 보수가 동의하는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고, 보수정부는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발 한발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남한이 일방적으로 동의하거나 북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합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입니다. 북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문제만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남북협상의 주체라는 생각을 안해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것이 주체적 관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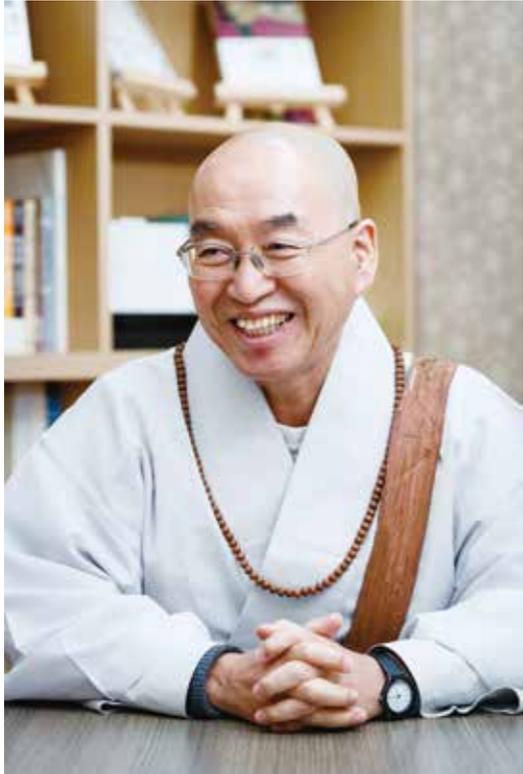
남한 안에서도 보수든 진보든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보수가 주체적 입장이라면 진보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진보가 주체라면 보수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때문에, 북한 때문에, 진보나 보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주인 의식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Q 우리 사회가 작은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영논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북문제도 내부의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종교를 예로 들면, 기독교와 불교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극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끼리 합의를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로 달라도 70~80% 사람들이 동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의 교집합을 만들어 내면 국민합의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합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부부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데 어떻게 전체 국민의 합의를 이끌겠습니까. 모든 것을 합의해야 한다는 것도 편협한 주장입니다. 합의되는 것은 합의해서 앞으로 나가고, 안 되는 부분은 서로의 차이로 인정해야 합니다.

Q 민간이든 정부든 개인이든 통일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A 제가 지난 20년간 활동한 결과로는 통일문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인 결단이 중요하고 둘째로 군사적 균형유지가 필요하고 셋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째로 경제적인 계산과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큰일은 정부가



99%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개발과 관련하여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하여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에 대비한 신기술 개발 등을 하고 북한 개발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제협의를 통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이 해야 할 가장 강력한 통일운동은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진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 봅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성장동력 약해진 한국경제
통일은 희망이 될 수 있어 ”

Q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나올 텐데, 시민사회의 가장 큰 역할은 건강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한다고 봤을 때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평화가 깨지면 엄청난 피해가 오고, 통일이 되면 엄청난 이익이 오는데,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이러한 의제는 이슈 밖에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성장, 복지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에 50% 관심을 가진다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20~30%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안 된다’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를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포용이지만, 약자가 강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굴복입니다.

굴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약자가 힘이 생기면 또 저항하거든요.

약간 힘이 있는 쪽이 약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면,

얼마든지 대화의 길은 열립니다.

하는 의식이 확고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적 정밀타격 같은 논리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너무 큼니다.

그런데 평화만 유지된다면, 분단된 상태로도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이 거의 소진됐고 정체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비전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북한개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고, 한국의 자본·기술이 북한의 노동·자원과 결합하여 향후 10~20년 정도의 성장 동력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면한 우리 경제의 정체를 극복하는데 통일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단의 질곡을 미래의 희망으로 관점을 바꾸면서 통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이 분명하다면 먼저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해야 하고, 이러한 대화를 남한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최강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인구도 북한보다 두 배나 많은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를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포용이지만, 약자가 강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굴복입니다. 굴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약자가 힘이 생기면 또 저항하거든요. 약간 힘이 있는 쪽이 약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면, 얼마든지 대화의 길은 열립니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Q 민화협을 비롯한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첫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남북 당국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하고 있는데, 정부와 역할을 나누어서 일단 민간이 대화의 물꼬를 먼저 터

야 합니다. 둘째, 민간이 앞장서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하고, 셋째는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즉 우선 대화를 하고, 어렵다면 좀 도와주고, 서로 교류협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화협이 대화의 창구, 인도적 지원의 창구, 교류협력의 창구를 여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 기반 위에 이산가족 문제 등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한은 조건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품격에 맞게, 국제사회가 정한 원칙대로 보편성에 기초를 두고 우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 사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차원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남북관계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비공식 접촉이 필요합니다. 비공식적인 논의를 토대로 공식 논의를 열어 가야 합니다.

Q 남북 주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새해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세상이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되어도 행복하고 안 되어도 행복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멀리 보고 가야지, 당면해서 문제를 풀려면 어렵습니다. 지금 남한의 정치변화도 불과 두 달 전 만해도 예측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남북문제도 어느 순간에 해빙모드가 올지 모릅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를 막아놓으면 다음에는 막아놓은 독의 물이 터지듯 빠르게 흘러가는 시기가 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2017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

기획연재_ 통일로 가는 길 ⑫

환각지 현상에서 벗어나 단일국가 방식의 통일담론 극복해야

최완규 신한대학교 설립자 석좌교수

1민족, 1국가의 터전이었던 한반도가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지 69년이 되었다. 이 긴 세월동안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통일을 말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동안의 비현실적인 통일론의 전개과정과 통일 환경의 대내외적 조건으로 미루어 볼 때, 남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단일 국민국가 방식의 평화통일을 성취한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과 같다.

남북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도 환각지(幻覺地)현상의 틀 속에 갇힌 채 통일논의를 해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환각지 현상은 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리나 팔을 절단한 사람이 한동안 자신의 잘린 다리와 팔이 여전히 그대로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메를로 폰티(M. Merleau-Ponty)에 의하면 이것은 일종의 질병 부인(anosognpsie)현상이다. 때로 어떤 환자는 잘려나가고 없는 팔과 다리에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남북, 체제와 이념의 상용도 높여갈 수 있나

여찌 보면 남북한은 모두 허리부분이 잘려 이미 두 개의 서로 완전히 다른 몸통이 되어 버린 한반도가 여전히 하나의 몸통인 것처럼 착각해 왔다. 이러한 환각지 현상 때문에 남북한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방식 또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한반도(평화)통일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논의의 현실이 말해 주고 있듯이 이러한 통일론은 실천이 어려운 정치적 수사의 반복일 뿐이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같은 민족 간의 대결과 경쟁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북 쌍방 중 어느 일방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지를 더 받는 정통성 있는 체제와 이념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분단이나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이 공유했거나 공유할 수 있는 상상의 정치공동체(imagined political community)가 있을 수 없다. 즉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치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남북한이 아무리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 정치권력 차원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적어도 남북한이 정치권력 수준에서 공동이익 영역을 마련하려면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의 상용도(compatibility)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통일 이후의 정치공간에서 남북한의 핵심 정치세력들 간에 권력을 공유하면서 협치(power sharing)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상극인 한, 각각의 통일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어

1969년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 만들어진 평화의 벽(Peace Wall). 이 지역은 1998년 '성금요일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신교도와 구교도의 충돌이 극심했던 곳이다.



는 통일 이후의 정치 공간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이념 및 정치세력을 배제시키는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시대와 통일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사적 차원의 진폭은 있어 왔지만 통일정책의 본질이 변화된 적은 없었다.

한반도 통일의 주요 대외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도 어느 일방이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일국가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존의 적대와 경쟁의 관계를 넘어 새로운 대국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미국에도 좋고 중국에도 좋은 한반도 통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일국가 방식의 통일담론 극복을 위해

그렇다면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논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우선 한반도의 통일을 남북한이 단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만 보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상대방을 타자화시키고 권력에서 배제하는 단일국가 방식의 평화적인 흡수 통일방안은 존재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정권 붕괴가 아니라 국가 붕괴가 일어나고 북한주민과 주변 강대국의 동의 내지 묵인을 전제로 할 때만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내전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흑자는 독일 통일 사례를 들어 독일 방식의 통일을 꿈꾸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 이전에 이미 강력한 근대성을 갖는 정치공동체를 공유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내전을 겪지 않았고 동독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도 성취하였다. 동독은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소련이 개입을 철회하자 자체의 정치적 역량으로 서독과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동서독과 남북한은 적절한 비교성이 없다.

역설일 수도 있지만 남북한은 서로 단일국가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지 않거나 포기할 때 사실상의 통일은 시작될 수 있다. 바람직한 통일의 기본 방향은 남북한의 기존 국가체제와 이념 및 정부를 일거에 허무는 빠른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국가를 인정하고 장기간의 평화공존 체제를 제도화하면서 체제와 이념의 상용도를 높여가는 데 두어야 한다.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다양한 정체세력들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한 ‘성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 Belfast Agreement)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체제를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계시적 모델(heuristic model)이 될 수 있다. 남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다양한 정치세력,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성금요일 평화협정의 핵심은 그동안 대결과 갈등을 해왔던 여러 세력들 간의 권력 공유, 즉 협치(협의주의)의 원칙에 있다.

이 협정은 체결 즉시 남북아일랜드의 국민투표에 부쳐 승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일랜드공화국의 국민투표에서는 아일랜드공화국의 헌법에 규정된 영토 및 통일조항을 수정했다는 사실이다. 아일랜드공화국 기존 헌법 2조에서는 아일랜드공화국의 영토를 아일랜드섬 전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일랜드섬에서 태어난 개인은 ‘아일랜드 민족(Irish nation)’의 구성원이라고 개정함으로써 북아일랜드에 대한 배타적 영토성을 주장해 왔던 기존의 입장을 포기했다. 또한 3조에서 아일랜드섬의 통일은 평화적 방식으로만 이

루어져야 하고 통일은 남북아일랜드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했다. 이 두 헌법 조항의 수정으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성금요일평화협정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해야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이 서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평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주요인으로 북한의 도발적 언사와 행태, 개혁·개방의 외면, 제재와 봉쇄를 자초하는 핵과 미사일개발의 강화 등을 들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비타협적인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면에는 남한이라는 대안 국가에 의해 자신들이 흡수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사실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토 완정론(한 국가의 영토를 단일한 주권하에 두는 완전한 통일)이 말해 주듯 북한의 주권이 전 한반도에 관통하는 북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민족 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최소한의 통일 명분을 확보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조짐을 보여 왔다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방안인 연방제안도 패권 내지 혁명전략에서 점차 현상 유지 전략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제력과 사회 역량, 국제환경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남한이 선제적으로 경제협력과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하면서 강대국들과 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제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헌법의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과 4조의 통일조항(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실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은 상호 모순적 측면이 있다. 영토 조항에서는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통일조항에서는 사실상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주권 국가로서 유엔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두 국가적 실체가 공인되었다.

특히 통일조항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통일을 규정함으로써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남아일랜드는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전향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북아일랜드의 흡수 통일 의구심을 해소했다. 그 결과 남북 아일랜드의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성금요일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남북한 모두 단일국가 방식의 통일을 강조하면 할수록 쌍방 간의 불신과 갈등은 심화되고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통일의 가능성도 그만큼 멀어진다.

이제야 말로 통일이 반드시 단일국가체제를 수립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각지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때 실질적인 통일이 시작될 수 있다. 

최원규는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신한대 설립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7년

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를 내다본다



사회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대담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서 현실적인 대북·대외정책 필요해

2016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 출현과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구,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러시아의 행보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국제사회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 등으로 공공 얼어붙었다. 한층 어려워진 대내외 환경 속에서 2017년을 맞이하면서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들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보았다.

정리 박윤수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사회자(신석호) 먼저 각 분야별로 2016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 2016년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고도화된 시기였던 것 같다.

조남훈 2016년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 완전한 냉각관계로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5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과거 북한이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하던 원칙이 깨진 것이다. 북한은 또 무수단 미사일 발사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 핵 탑재 운반수단에 대한 실험을 거듭했다. 2016년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집중했던 해였다.

박인휘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국제제재가 실행되었다. 초기부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전례 없는 두 차례의 대북제재가 도출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문제는 그러한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론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중동이나 남미처럼 경제제재를 통해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있긴 했다. 하지만 그 케이스에 북한이 온전히 해당되는 것 같진 않다. 2016년 우리는 대북제재를 강력히 했고 국제사회가 적극 협력했지만,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었던 것 같다.

사회자 국제제재는 북한의 경제를 붕괴해 북한 정권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북한 경제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있었다고 보는가.

김석진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2270호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수출



사회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출에 대해 '민생용이면 허용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용이면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개별 거래가 민생용인지 대량살상무기 개발용인지 판정할 기준, 방법, 절차가 안보리 결의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5년 4분기가 바닥이었고, 2016년 들어서는 직전 분기 대비로 보면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외의 무역통계를 봐도 제재 영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2016년 11월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석탄 수출에 대해 민생용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연간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상한제를 통해 2017년의 제재 효과를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석탄 수출에서 7억 달러 감소, 나머지 수출을 더해 총 8억 달러 정도 북한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버금가는 경제 파탄에 다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석탄 등 광산물 수출은 제한하지만 다른 부분의 무역은 계

속 진행될 것이며, 그 정도로 북한이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전영선 매년 많은 연구기관과 단체에서 남북관계 성과와 전망 또는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곤 했다. 그런데 2016년은 그런 논의조차 의미 없는 것 같다. 5·24 조치의 예외 조항이었던 인도적 대북지원도 막혀있는 상태고 남북관계는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남북관계에 대한 동력 자체가 많이 상실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러 모로 기반이 와해된 상태다.

“
**남북관계 단절 속
정치·경제적 안정 추구한 북한
대북제재 효과는 좀더 지켜보아야**
”

사회자 이번에는 김정은 체제 5년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보겠다. 김정은 체제 5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전영선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비교적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한다. 북한 체제를 김정은 식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 불안을 잠재우는 것인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김정은 체제는 미국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긴장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 그 결정적 요인은 역시 경제다. 경제가 안정되고 그 사이 큰 자연재해가 없었다. 김정은식 체제가 세팅된 것이다. 김정은은 또 3대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에서 결국 핵을 완성시켰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핵개발은 북한 주민들에게 불안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의 성과

이자, 굉장한 자신감으로 선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북한 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 역사적 관점이고, 현재 단기적 상황을 보면 사회주의 요소와 자본주의 요소가 공존하는 이중구조 상태에 있다. 북한 정권은 자본주의적 부문의 성장을 용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부문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재건, 복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시장과 사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활용하면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기존 사회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장래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조남훈 북한의 핵실험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 첫째 내부 통합, 미국에 대한 시위 등 정치적 목적이다. 다음으로는 기술적 목적이다. 현재 북한은 핵의 소형화, 경량화에 거의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그 스케줄에 맞게 실험을 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핵개발을 한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최초의 핵실험으로부터 핵을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까지 가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사실상 다중화는 다른 문제지만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가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닐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탄두 면에서는 거의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인휘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동맹국 정치를 매우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결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과거에 비해 한국 정부에 일정 부문 자율성을 준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정부의 북한 문제 접근에 자율성이 부여된 게 사실인데 결국 그 자율성의 공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다. 그동안 창의적 정책 개발보다는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수동적 반응 위주로 한미관계가 발전했고, 우리가 그것을 의미 있게 전환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미국을 우리 편으로 더 확실히 끌어들이는 게 북한 문제 해결의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보수 정권에 깔려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 문제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아이러니한 결과다.

“
**핵 포기 등 변화 거부하는 북한에
미국·국제사회의
더 강경한 압박정책 이어질 것**
”

사회자 그럼 이제 2017년을 전망해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중관계와 남북관계도 새롭게 판이 짜일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보는가?

박인휘 지난 20세기 미국 공화당 정부의 최대 외교적 성과를 꼽자면, 아마 미중 데탕트를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 소련을 관리하고 결국 냉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 행정부라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존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다. 눈여겨볼 것은 기존 미중 간 감정적, 수사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경쟁이 최근 들어 매우 구체적인 제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AIB, 상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미국의 기존 틀을 대체하는 틀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강대국 간 게임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을 관리, 억제하는데 러시아를 활용하려는 미국의 발상도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미중 중심의 경쟁구도가 악화된다는 건, 한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정권은 자본주의적 부문의 성장을 용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부문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재건, 복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시장과 사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북한정권은 이를 활용하면서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상황이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도 문제, 북한문제의 해결과정과 해법 모색이 미중관계에 의존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져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남훈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로 지명된 사람들이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많은데 하나같이 매파다. 기본적으로 과거 오바마 정부의 국제정치 기반은 롤 베이스였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기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자 자체가 대화에 자신이 있고 좋은 솔루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북한과 대화는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 결국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고 다시 강경으로 돌아서리라 본다. 하지만 미국 안보 라인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IS에 대한 대응이다. CIA 국장이 된 폼페이 상원의원이 유세기간 중 “적국에 대해 비물리적 타격을 해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 전쟁이나, 레이저, 극초단파 등을 사용해 공격하는 것이다. 정보유입도 이에 포함된다. 과거보다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다.

김석진 북한이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과 흡사한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중국인들 중에는 북한도 우리 길을 따라 올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경제적 체제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결국 이념이나 정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이념의 해방과 정치적 해방이 먼저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덩샤오핑이 만들고 정치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개혁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는 이념 해방도 없고 정치적 해방의 분위기도 없다. 그런 게 없으므로 중국 개혁개방 시기에 출현했던 수준의 개인 사업가들, 즉 기업가들을 북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북한의 ‘돈주’가 주목받지만 돈주는 중국 개혁개방 시기의 기업

확실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기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자 자체가 대화에 자신이 있고 좋은 솔루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 결국 북한의 속내를 파악하고 다시 강경으로 돌아서리라 본다.

가들과는 달리 발전수준이 낮고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돈주가 중국식 기업가로 발전하려면 이념과 정치가 크게 변해야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처한 대외, 대남관계도 그런 식의 정책을 펼 만한 조건이 아닌 것 같다. 당분간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회자 북한 내에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과도 관계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은가.

김석진 과거 중국에서는 이를 관료 자본주의라고 했다. 관료와 기업가가 서로 연합해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본래의 관료 자본주의는 부정적 표현이었지만 개혁 개방 시기의 관료 자본주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것이 긍정적 현상이 되려면 생산적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관료와 돈주의 유착은 생산적 활동이 아니라 시장이나 사경제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관료나 간부들이 착취하는 수탈적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 생산적 성격보다는 수탈적 성격이 더 강하니 북한 경제의 바람직한 변화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다. 과거 중국은 관료가 뒤를 봐주고 기업가들이 약진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는 그런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전영선 남북관계도 변화가 쉽지 않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어려워질 것 같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뭔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른바 보건의료, 예방, 민족문화사업 정도만 가능할 거라고 본다. 북한 사회 변화는 어렵다. 결국 반대 상황이 연출되어야 한다. 적어도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세력화돼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게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부터 차단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정책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실현가능한 대북정책 목표설정 필요

사회자 그러면 우리는 2017년 새해에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정치권과 정부, 시민들이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보나.

박인휘 현실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핵개발 완성이 거의 눈앞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한 두 차례 더 실험하고 핵개발이 완성되었다고 진단할 것이다. 심지어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 중지 선언, 핵실험 모라토리엄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향후 비핵화 정책,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걸 연결시키면 오히려 비핵화가 더 어렵게 된다는 적극적,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건 시진핑의 중국이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제안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핵 완성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정하는 비핵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비핵화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진보정부의 대북정책,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를 경제로 교환하려는 접근법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안보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와 생존의 문제를 오로지 경제적 대상으로만 접근했던 자세 역시 바뀌어야 한다. 일정 부문은 안보를 경제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근본적 부분을 대체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조남훈 우선 대북제재를 계속 강하게 지속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제재를 시작했으니 이제 10년 동안 대북제재를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2016년 들어 직접적이고 강한 제재가 실현된 것으로 대북제재로 보면 몇 달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중국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거의 효과 없었다. 대북제재를 더 강하게 하는 게 다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핵 문제에 있어 경계해야 할 게 핵 동결이다. 우리는 핵 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최종적 조치로서의 핵동결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핵 동결을 옵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거리 미사일은 없으니 미국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위협하다. 또 위험여부를 떠나 북한이 핵 국가로 인정되면 발언권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핵 동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국이 이를 제기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김석진 향후 대북정책은 근본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현실적 노선을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대북정책의 목표 수준을 낮추어 잡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 비핵화 달성도 어렵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하기도 어렵다. 원대한 목표만 생각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선 대북제재의 기초는 유지해야 한다. 현 제재 정책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정책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합의로 정착된 것이고 비교적 합리적이다. 이제까지 제재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으나 이번 제재는 비교적 강력하다. 이걸 밀고 나가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고 북한 정권이 생각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걸 연결시키면 오히려 비핵화가 더 어렵게 된다는 적극적,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핵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핵을 가진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비핵화가 가능하다.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을 바꾸도록 노력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제재만이 유일한 대북정책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정권을 제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민생지원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유엔 산하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중단되어 있다. 이 부분도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권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돕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 가며 북한 당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촉구해야 한다.

전영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너무 결과지향적인 정책만 폄하됐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구체적이지만 결과 지향적이었다. 남북관계나 통일문제, 대북정책의 출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과만을 따지고 정책을 집행하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나 폭이 줄어든다. 이제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우리가 왜 고민하는지, 그 지향점으로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두 가를 병행해야 한다. 먼저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인도적 지원도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게 한국의 정상적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지게 될 이전과의 차이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인권법을 전개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인권법에서 규정하는 북한 인권개선문제와 현실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이 필요한 부분들, 예컨대 보건의료나 예방 쪽은 반드시 가야한다.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회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제안들이 민족화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북한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너무 결과지향적인 정책만 폄하됐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구체적이지만 결과 지향적이었다. 남북관계나 통일문제, 대북정책의 출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과만을 따지고 정책을 집행하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나 폭이 줄어든다. 이제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우리가 왜 고민하는지, 그 지향점으로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특집_ 2017년,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 ①

국민 의식 속의 통일, 부풀려진 '남남갈등'

이상신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부장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보수와 진보의 대북, 통일의식 차이는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다. 사진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화협이 발족한 특별기구 '통일공감포럼'의 1차 통일공감대화.



통일과 북한 문제는 항상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그들'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렇게 남한 사회 정치적 갈등의 밑뿌리에는 이러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다는 시각을 흔히 '남남갈등'이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통일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남남갈등'이 과연 실재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 여론조사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4자필승론"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보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후보가 보수 진영의 표를 서로 나눠 갖게 되는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대중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던 이 논리는, 이른바 '정치 9단'이라고 불리던 당시의 3김씨들 조차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점점 약해져 가는 국민의 통일의지

그렇게 한국에서 여론조사가 태동하고 있던 1994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일의식 연구의 효시라고 할 만하다. 통일연구원에서는 이후에도 2~3년에 한 번씩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 그만 중단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대부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로 이어졌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례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 및 북한 인식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통일연구원에서도 2014년

부터 다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조사 내용과 차별되는 문항을 사용하고 있어서 서울대의 데이터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4년 통일연구원의 첫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었다. 이 조사에서는 91.6%의 응답자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1990년대 초까지는 통일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 진보건 보수건, 어떤 정당을 지지하건, 통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가적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22년이 지난 2016년 여름, 통일연구원의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는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가 15%,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가 58.2% 였다. 즉, 통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73.2%로 떨어졌다. 그나마 60% 가까운 사람들은 통일의 원칙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통일이 긴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뜻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예 솔직히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16.6%, 노골적으로 "절대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2.2% 였다. 여기에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8%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여 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진보 혹은 보수가 이 통일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가급적 빨리 통일'의 경우 진보가 13.6%, 보수가 17.4% 였다. 즉, 보수가 좀 더 통일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문항을 선택한 진보는 64.8%였고, 보수는 5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두 문항의 답을 합하면, 통일에 긍정적인 진보는 78.4%, 보수는 72.9%가 되는데, 이는 오차범

최소한 남남갈등은 국민들의 의식 차원에서는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일정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갈등을 가지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온 것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통일과 북한에 대해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

위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보수가 진보보다 통일에 더 적극적이거나, 반대로 진보가 보수보다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덜 애국적이라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남남갈등은 찾기 힘들다.

통일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 크지 않아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북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설문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2014년 이전에는 사지선다식 문항을 사용했다. 즉,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이라는 네 가지 답지 중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북한을 고르도록 했다. 그러던 것을 2014년부터는 네 개의 문항으로 각각 나누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북한이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동의하는 정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통계 결과를 제시할 수 없어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진보 응답자들은 북한을 좀더 ‘지원대상’ 혹은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반면 보수 응답자들은 북한을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러나 이 이념 차이는 결코 과장되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2016년 조사에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보수가 58.1% 이었던 반면 진보의 경우도 41.5%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수는 적대대상으로 볼 것이라는 이분법은 성립하기 힘들다. 진보와 보수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의 차이는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를 의미할 뿐이다. 위의 통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보수가 이념을 가진 한국인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북한을 ‘적’이라고 믿고

있을 확률은 58.1%이다. 즉,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을 확률도 31.9%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반대로 무작위로 뽑힌 진보적 한국 시민이 북한을 적으로 여기고 있을 확률은 41.5%이다. 확실히 보수의 경우 보다는 낮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결코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추상적인 통일의 원칙이나 북한의 이미지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도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39.8%의 진보가 경제협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33.6%의 보수 또한 경제협력에 찬성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남남 갈등은 발견할 수 없다.

차이의 부각보다 공통분모를 먼저 생각하자

그나마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좀 나는 항목을 찾아보자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약 절반 정도(49.2%)의 진보가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보수는 삼분의 일이 좀 넘는 정도(36.8%)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숫자의 보수 국민들이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른 정책에 대해 물어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진보 68.2%, 보수 63.2%), 대북 전단 살포금지에 대한 찬성(진보 56.8%, 보수 44.4%), 대북 제재 강화 (진보 49.2%, 보수 67.0%)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나타난다. 즉, 진보와 보수는 북한과 통일,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 의견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차이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따져보면 한국 사회는 항상 북

한 문제를 놓고 큰 갈등을 겪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은 상대방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집권하지 못하면 당장 적화통일이 되거나 영구분단 상태가 될 것처럼 주장한다. 심지어 이러한 남남갈등 때문에 원내 의석을 가졌던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판결을 받은 것이 오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최소한 남남갈등은 국민들의 의식 차원에서는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 일정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갈등을 가지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온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국 정치는 또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로 빠져 들었다. 현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예정보다 일찍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항상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의 대북관, 통일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비난 등이 선거 쟁점이 되어온 역사가 있다.

물론 분단국가의 수반이 될 사람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후보 간 사소한 차이를 과장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사회갈등을 조장할뿐더러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통일과 북한에 대해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상신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와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중점교수를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집_ 2017년,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 ②

역사 속의 통일, 포용·통합의 과정으로 이를 수 있어

정창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강사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측 대표 윌리엄 해리스 중장(왼쪽 탁자)과 북한 인민군 남일 대장(오른쪽 탁자)이 휴전협정에 조인하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지도 70년이 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후 패전국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편의적으로 그어진 38선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38선을 획정하는데 참여한 딘 리스크 대령조차도 국무장관을 거친 후 조지아대학 교수로 있던 시절에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분단 상황에 놀라움을 표시했을 정도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분단을 과거 역사 속 삼국시대나 남북국시대와 비교하기도 한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고려로 통일되고, 발해가 멸망한 후 일부가 고려에 흡수된 것처럼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현재의 남북분단도 필연적으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긴 역사적 호흡에서 보면 타당한 지적이지만 현재의 남북분단과 삼국, 남북국시대의 분열 사이에는 역사적 시차를 넘어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삼국, 남북국시대의 분열은 수많은 작은 나라(小國)에서 세 나라 혹은 두 나라를 거쳐 고려로 합쳐지는 자체적 통합과정이었다. 기본적으로 당시의 분열은 통합으로 가는 한반도 내부의 역사 발전을 의미한다. 서양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동양에서 일반적으로 왕조의 교체는 일정 기간 분열 또는 분단을 초래했다. 명나라가 원나라를 남쪽에서부터 분열시키며 등장하였고,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등장 역시 통일신라를 분열시키며 일정기간 분리된 상황으로 이어졌다. 아무도 이러한 분열을 '분단' 혹은 '분단체제'라고 이야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분단은 다르다. 현재의 남북 분단이 과거 고대와 중세시기의 분열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뤄지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적 분열'이 아니라 현대 냉전체제에 의한 강제적 분리와 외세 개입에 의한 온존이라는 점이다. 즉 일제의 강점과

외세의 분할점령이라는 외세의 개입이 민족사의 정상적인 발전과 통일을 저지, 왜곡시킨 것이다.

민족 내부의 갈등과 분열은 분단의 부차적 요인

물론 과거 역사에서도 외세의 개입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신라는 '삼국통일전쟁'에서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강한 간섭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세의 활용과 개입이 분열을 가져오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반면 남북분단은 일본의 강점과 주권 상실,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분할 점령 속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의 대립이라는 세계사적 냉전체제 하에서 강화되었다. 더구나 냉전체제가 해체됐지만 의연히 남북분단의 대치구조는 해체되지 않았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분단 원인의 한 축인 국제적 냉전은 사라졌지만 한반도의 분단이 남한과 북한, 미국의 삼각 구도에 기초해 유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단의 특수성'이 놓여 있다.

지금까지 분단기원론은 민족 내부의 갈등과 분열에 있다고 보는 견해(내인론)와 궁극적 책임이 외세에 있다고 보는 견해(외인론)로 대별된다. 물론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복합적 요소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가가 초점이다.

남북분단을 사회계층(세력)간의 대립 차원에서 보는 내인론은 현재의 분단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갈등에서 연원을 찾는 좌우대립론은 분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대단히 일면적인 분석이다. 남북 분단에 한반도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차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이 작용했지만 그러한 차이는 부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사상



1972년 9월 순찰 나온 남측 헌병들이 군사분계선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과 이념의 차이로 한 나라가 사회적으로 분열된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다. 좌우대립 또한 유럽, 러시아,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미국까지 훨씬 적지 않으며, 대립하지 않은 좌우가 없다는 게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다. 역사는 끊임없이 중앙과 지역, 친구세대, 사상과 이념 등의 갈등과 대립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유독 한국만 좌우 대립이 '억압적 분단'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발생초기 분단이 내인론으로 초래됐다고 하더라도 분단문제가 국제화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분단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외세의 배제나 활용 없이 우리 내부의 좌우갈등만 해결한다고 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분단을 소련의 책임이나 소련과 미국의 공동 책임으로 돌리는 견해도 지금 현실에서는 공허해질 수 있다. 소련이 붕괴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분단의 책임이 오로지 미국에 있다는 주장도 중국이 동북아에서 급부상해 한반도 통일의 상수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시대에 뒤떨어

진 인식이다. 이미 한반도문제는 4자 또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분단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성

현재 '분단체제'라는 규정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서로 다른 내용으로 사용된다. '분단체제'란 개념이 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 즉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또는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남북한 수구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 또는 상호의존'에 의해 자기 재생산 능력을 갖춘 구조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시간적으로 남북분단이 반세기 이상 유지됐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는 체제'로도 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체제로 정착됐다고 할 수 없이 때문이다. 실제로 '분단체제'는 지난 70여 년간 간헐적인 대화와 협상 또는 전쟁위기를 통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 왔다.

더구나 북핵문제가 고조되면서 분단을 제도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휴전협정조차도 '군사분계선'만 지켜지고 있을 뿐, 비무장지대는 '열전지대'로 변질되었고, 평화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대부분 사문화, 무력화된 실정이다. 과거에는 '분단체제'가 작동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제도적 보장이 없는 불안정성'이 분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분단은 안정적인 제도나 규약이 아닌 '힘의 대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한 축인 북미관계는 여전히 '휴전 중인 적대 상태'이며, 현실에서 그 양상은 '군사적 대립'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라는 두 측면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통일 한국의 꿈은 버리고 사이좋은 이웃나라로 살자"는 인식이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지속적으로 합종연횡과 전쟁으로 이어진 것처럼 궁극적으로 분단은 공존이 아니라 통일로 극복돼야 할 문제이다.

분단의 과정만큼 통일의 과정도 긴 시간 필요

38선은 단숨에 그어졌지만 남북분단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미소의 분할점령이라는 지리적 분단, 1948년 남북 두 개의 분단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분단, 그리고 국제전으로 비화된 한국전쟁이라는 적대적(정서적) 분단 등 8년간의 치열한 남북 갈등 속에서 형성됐다. 그 이후에는 남에서는 자본주의가, 북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들어서면서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반세기 이상을 따로 살았다. 그렇게 정착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삶의 양식은 짧은 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신라가 약해지면서 후삼국이 재현된 역사적 선례는 통합과 통일의 과정이 얼마나 어

려운 과제인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보다는 상당한 준비와 교류를 했지만 통일 후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독일, 서로 다른 체제에서 전격 통일했다 재분열과 재통합을 거친 예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힘의 대치로 유지되는 남북 대립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교류 상황'으로 바꾸아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나 6·15공동선언, 10·4선언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남북분단과 대치과정이 길고 폭력적이었던 만큼 통일과정은 그보다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성급하거나 갑작스러운 통일보다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준비할수록 통일의 시기는 오히려 단축된다'는 인식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곧 '과정으로서의 통일'이고 '사실상의 통일'과정이다. 휴전 상황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그나마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남북 간 평화공존을 뒷받침하는 한반도비핵화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자체붕괴론', '압박을 통한 북한붕괴론'이 재생산됐고,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그것을 감당한 능력도 부족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역설적으로 강한 압박은 북한체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시대의 평안도지역 차별이나 근현대사 시기의 호남지역 차별이 통합보다는 저항으로 나타났듯이 통일은 압박이나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의 과정으로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⑤

정창현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전문기자, 국민대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평양의 일상-사진으로 복원 생활을 엿보다』 등이 있다.



특집_ 2017년,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 ③

북핵과 통일, 한반도 비핵화는 통일의 전제조건

김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독일통일을 이끌었던 주역 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009년 10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만났다. 당시 독일통일은 비핵준수를 약속했기에 가능했다. ©연합



북한은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의 경제·외교 제재를 받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이자 공포정치와 궁핍이 만연한 인권부재 국가로서 솔한 내부적 모순을 축적하고 있지만, 북핵의 고도화는 쉽지가 않다. 이렇듯 '통제불능의 시한폭탄'으로 자리매김 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 무수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고, 동북아에서는 미중 간 그리고 미일동맹과 중러 전략적 제휴 간 대결구도를 첨예화시키고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키는 촉매이며,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 군사균형을 붕괴시키고 한국의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다.

그럼에도 북핵의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개정헌법을 통해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포한데 이어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도 '수소탄까지 보유한 불패의 군사강국'임을 선언했으며,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핵포기는 없다"는 맹세를 되새기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북핵을 제재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생존을 돕는 중국의 이중플레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대미(對美) 견제용 카드로 인식하고 있어 이중플레이가 근절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 북한은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온 국가로서 제재에 민감하지 않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당장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에게는 한반도에 드리운 북핵의 짙은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한반도에 드리운 북핵의 그림자

북한정권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를 간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내적으로 핵무기는 백두혈통 영도체제의 정통성과 권위를 뒷받침하는 선전 수단으로서 후광효과(halo effect)를 발휘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체제 간섭을 불식시키고 대등한 협상 위상을 가지게 해주는 수세적·외교적 수단으로서 동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를 발휘하며, 동시에 미국 여론을 흔들며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단하는 효과(decoupling effect)를 발휘한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게 해주는 지렛대이다. 이렇듯 핵무기의 대내·대미·대남용 효용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을 '핵의, 핵에 의한, 핵을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북핵은 한국에게 다양한 안보딜레마를 강요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위협, 핵그림자 효과에 의한 심리적 위축, 돌발사태(Black Swan)나 핵무기 실종사고(Broken Arrow)의 가능성, 핵안전사고로 인한 핵오염 가능성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이다. 핵그림자 효과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핵 공갈(nuclear blackmail)만으로도 한국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군사·외교·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빈번하게 '청와대 타격', '서울 불바다' 등 핵 협박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핵 공갈 전략은 이미 구사 중이며, 한국은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1/40에도 못 미치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 국면 조성과 대화 국면 전환을 주도해왔으며, 핵을 보유한 자신들에 대해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같은 대담한 도발을 자행했다. 즉, 핵그림자 효과는 북한에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지렛대를 제공하면서 대남 재래도발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북핵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항구적 남북상생 구도의 정착’은 쌍방간 무력충돌이 완전히 불식되어야 가능하지만, 핵그림자 효과는 북한에게 끊임없이 도발 동기를 부여한다.

물론,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제쳐두고 대북지원과 경제교류에 나선다면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만, 북한이 핵이라는 비대칭 수단을 앞세우고 언제든 대남도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상생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자비(?)를 구걸하는 ‘비굴한 상생’이 되기가 쉽다.

북핵과 남북교류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이와 관련해서는 ‘연계론’과 ‘비연계론’의 타당성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연계론은 핵문제와 남북교류를 연계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단절해야 한다는 ‘보수’의 주장이고, 비연계론은 핵문제와는 별개로 교류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진보’의 주장이다. 연계론은 교류협력이 핵무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을 가지지만, 통일을 내다보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비연계론은 동질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을 가지지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대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양쪽 주장의 장단점을 보면서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날로 엄중해지는 북핵 위협으로 인하여 비연계론의 설득력이 현저하게 잠식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핵은 세 가지 방법으로 통일을 가로막는다. 첫째, 북핵은 합의통일의 가능성을 봉쇄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명시한 헌법 제4조에 부합하는 합의통일이란 엄밀하게 말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에 이은 합의에 의한 평화적 흡수통일’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변화와 체제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수단으로 안보적으로 한국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순순히 한국이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바꾸어 말해, 한국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국력과 안보역량을 가져야 한다.

둘째, 북핵은 흡수통일을 저해한다. 흡수통일이란 엄밀히 말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단기간 내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을 의미하며, 독일통일의 경우에서 보듯 통상 합의통일의 형식을 거친다. 물론 흡수통일은 한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식이 아니며, 흡수통일을 위해 북한붕괴를 피하는 것은 남북상생 마저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통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 스스로의 문제에 의해 붕괴하고 북한주민의 대다수와 국제사회가 한국에 의한 흡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합의통일을 추구하되, 흡수통일에도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대비한다”가 정론이다.

흡수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북한 군부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과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정착금과 사회복지를 기대하면서 투항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여 ‘공화국을 지킨 영웅’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군이 투항해주기를 기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북핵의 존재는 북한군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북한군은 북핵이 한국에 의한 흡수를 막아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투항보다는 저항을 택하기가 쉽

고, 흡수통일 과정은 유혈충돌로 변질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셋째, 북핵은 통일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유발한다. 한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통일역량, 북한의 변화,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동의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한반도가 핵무기를 가진 상태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 찬성할 주변국은 없다. 독일통일의 경우 미국이 주변국들의 반대를 불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통일독일이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주변국들의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독일통일이 주는 최대의 교훈, 비핵화가 통일의 전제조건

독일통일은 많은 교훈점을 남기고 있지만,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선례를 제시했다. 1975년 소련의 SS-20 미사일 배치, 1979년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 등과 함께 동서방이 다시 핵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을 때의 일이다.

미국은 핵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 핵미사일들을 배치했다. 서독에서 격렬한 반핵운동이 일어났지만, 서독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여 배치를 강행했었다. 이후 핵 경쟁에서 소련이 패배하면서 1987년 미소 간 중거리 핵폐기조약(INF)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91년 9월 1일까지 사거리가 500~5,500km인 모든 지상발사 핵미사일들이 폐기되었다. 서독에 배치되었던 퍼싱-1B, 퍼싱-2, BGM-109G 그리폰 등도 폐기되었다.

독일통일은 INF 조약이 이행되던 시기에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기시권대로 들어오자, 서독정부는 통일독일

의 비핵준수를 반복적으로 약속했다. 1990년 7월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와의 코카서스 회담에서 통일 후 핵 및 화생무기 불보유와 병력 상한선 37만 명을 약속했다. 핵관련 국제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선언했고, 1990년 마지막 모스크바에서 열린 마지막 ‘2+4’ 회담에서도 핵 및 화생무기 불보유를 재확인했고, 독일-폴란드 국경선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주변국들은 동서독의 약속을 신뢰했고, 미국은 독일통일의 전도사를 자처하여 주변국들을 설득했다.

진실로 독일은 축복받은 나라였다. 우세한 경제력, 압도적인 군사력, 국론단합, 정책일관성, 외부지원세력, 외부 위협세력 부재 등 6대 조건이 모두 들어맞았다. 여기에 비하면, 한국의 통일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 북핵으로 인하여 재래 군사력의 우위는 의미를 잃고 있으며, 정부 교체에 따라 정책은 좌우를 오갔으며, 적극적인 통일지원 세력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라는 강력한 위협세력이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국론은 늘 분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분단국인 한국에게 있어 통일은 대체 불가능한 목표다. 그렇다면, 북핵이 상생과 통일의 지대한 장애물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확고한 안보우위가 상생과 통일의 초석이라는 사실은 늘 명심해야 할 진리이자 독일통일이 남긴 최대의 교훈일 것이다. 

김태우는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정년퇴임했으며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자문교수,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제11대 통일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건양대 교수,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
평범한 이들이
만드는
평화와 통일을
꿈꿉니다
”

박창일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

2003년 11월 평범한 이웃들이 힘을 모아 작은 단체를 꾸렸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녘의 아이들과 소외 받는 지구촌 이웃을 돕자는 뜻이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작지만 소중한 정성을 모아 북녘 동포와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눔, 평화, 화해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3000. 2016년 제14회 민족화해상 '민간교류' 부문 수상 단체로 선정된 '평화3000'의 박창일 운영위원장(신부)을 만나 '평범한 이들이 만드는 평화와 통일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장 사진 **김도형** 객원작가

“뜻밖에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민화협을 비롯해 심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평화3000 회원들에게 주시는 상이자,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실무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평화 3000이 앞으로 더욱 더 평화와 통일의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3000은 2003년 11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를 꿈꾸며 설립되었다. 박창일 신부의 말을 인용하자면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 하나 없는” 단체지만, 어쩌면 그렇기에 지금까지 평화3000이 걸어온 길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지도 모르겠다. 평화3000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물론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지구촌 곳곳에서 개발구호사업을 통해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왜 이름이 평화3000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 자체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지요. 바로 나눔, 평화, 화해입니다. 하루에 100원씩 한 달에 3000원을 평화기금으로 나누자, 그리고 기원후 3000년, 새로운 미래 3000년의 평화를 만들어가자, 마지막으로 한반도 3000리(삼천리)에 화해의 씨앗을 심자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때문에 비록 작은 단체이지만, 북녘의 동포는 물론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자는 정신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평화3000은 2008년부터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 '희망의 다리' 등 개발구호사업을 전개해왔다. 가난한 이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집을 지어주었고, 다리가 없어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한 시간 넘게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튼튼한 다리를 지어주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수도 등 가난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었다. 평생 집 없이 살아왔던 가난한 노동자들이 집을 갖게 된 순간 가족을 부둥

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박 신부는 잊을 수 없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에서도, 도시 빈민이 많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구걸로 생활해야 하는 필리핀에서도 평화3000은 학교를 세우고, 공부방을 만들었다. 가난한 아이들이 천형과도 같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교육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아무런 꿈도 없이 오직 가난만을 물려받아야 했던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평화3000은 작지만 소중한 정성을 나누어 왔다.

최소한의 대북 인도지원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평화3000이 빛나는 것은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평화3000은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이 첨예한 순간에도 인도적 대북지원의 끈을 놓지 않았다. 창립 후 지금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인도지원사업을 이어온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평화3000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사업을 꾸려왔습니다. 비록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직접 북한을 방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유엔이나 해외동포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지난 정부 시기는 물론이고 지난 해 까지도 밀가루, 옥수수, 강냉이 등을 중국을 통해 지원했어요. 2016년은 특히 북한이 수해로 인해 함경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장판, 내복, 콩 등 당장 긴급히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보냈습니다. 이처럼 평화3000은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창립 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인도적 지원사업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의 주민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국가의



제14회 민족화해상을 수상한 '평화3000'의 관계자와 회원들.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북관계로 인해 직접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회적 방법들을 찾아 지원을 이어온 것이죠. 평화3000은 2017년에도 늘 변함없이 인도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박창일 신부는 평화3000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북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그 중 하나는 2007년 진행했던 평양 사동구역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이다. 북측에서 평화3000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북한의 기후 조건상 천연잔디보다 오히려 인조잔디구장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평화3000은 이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했고, 남측이 인조잔디와 축구장 트랙의 우레탄 설치를 맡고, 북측에서 관중석 현대화 등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을 맡기로 했다. 그렇게 남북이 함께 땀을 흘려 결국 인조잔디구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후 2010년 남아공월드컵이 개막하기 직전 다시 북한을 찾은 박 신부를 입국 심사대에서 알아본 북측 관계자들이 갑자기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평화3000에서 만들어준 인조잔디구장에서 북측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한 결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박 신부는 보람도 크게 느꼈지만, 남북 간 협력사업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평화3000의 북측 파트너인 조선카톨릭 교협회와 2013년 평양 장충성당에서 성당 설립 25주년 기념 미사를 함께 드린 경험이었다. 남북의 신자들이 함께 미사를 드리고, 점심도 함께 하고 소박한 잔치도 했다. 박 신부는 가톨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접촉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남북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평화3000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20여 년간 인도적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사업에 헌신해 온 박창일 신부는 이제 인도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달라진 북한의 상황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바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지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개발협력사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한 단체가 규모 있게 사업을 꾸리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컨소시엄 형태를 취해 장기프로젝트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물론 여전히 모든 북한 주민들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다른 욕구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7년 '평화3000'이 북측과 협력하여 추진한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평화3000

때문에 박 신부는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이 관심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산림녹화사업이나 농업개발, 보건의료사업 등이다. 박 신부는 이 사업들의 경우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박 신부는 '접촉을 통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남북 주민들이 서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늘면 늘수록 화해와 협력, 통일은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습니다. 저는 접촉이야말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서로를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 역시 접촉으로 풀어야 합니다.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지원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서로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북한을 알게 되고, 북한 역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접촉을 통해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



2013년 남북의 신도들이 함께 한 평양 장충성당 설립 25주년 기념 미사. ©평화3000

니다. 저는 통일이 결국은 상호인정과 공존의 자세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방이 일방을 구속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결국 만남을 통해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3000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의 마음 그대로 나눔과 평화 그리고 화해의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박창일 신부. 그는 인도지원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넘어 지구촌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3000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화해와 평화의 사도,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조금씩 버리고 비우고 살자고 말한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불필요하게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항상 파괴가 일어난다.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할 줄 안다면 삶은 더 운택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새해에는 남과 북 모든 이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

‘견제와 균형’ 갖춘 미국 권력, 트럼프 공포보다 한미관계 재도약의 기회로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가

2016년 12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충격과 우려감이 줄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막말 대항으로 알려질 정도로 과격하고 반문명적인 발언을 수도 없이 내놓았고,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구상도 제시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이익 우선주의를 추구한다는 것도 그런 구상 가운데 하나다. 이런 발언을 놓고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분담금 확대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걱정이 과민 반응이라는 지적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 트럼프의 파격 발언은 당선을 위한 전략으로 취임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 미국 정치의 ‘견제와 균형’ 특성으로 볼 때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트럼프 시대 미국 외교’에 대해 엇갈린 전망과 우려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고, 미국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의회의 견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가 언급한 이슈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외교 정책 수립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vs 의회,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 가치 수호

1787년 등장한 미국 연방 헌법의 1조와 2조, 3조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조항이다. 미국의 국부(國父)들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권력 분립 이론을 도입하면서 ‘견제와 균형’ 원칙을 꼼꼼하게 적용한 헌법을 만들어냈



2016년 12월 9일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를 방문한 트럼프가 연단에서 미소짓고 있다. 막연한 트럼프 공포보다 한미관계를 차분하게 점검해야 할 때이다. ©연합

다. 권력 분립 이론은 프랑스의 사상이 몽테스키외가 1748년 출간한 저서 <법의 정신>에서 제시한 것으로,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권력 분립 개념은 미국에서 특히 발달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연방주의 특성과 결합한 결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폭주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약 230년 전 미국의 국부들이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은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외교의 수장은 대통령이지만, 외국과의 조약 비준 권한은 상원에 있다. 상원이 조약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신문에 기고문을 올려서 상원에 비준을 촉구하는 한 명의 논객과 다르지 않다. 1919년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 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뒤, 전쟁의 참화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설득한 결과 국제연맹이라는 이름의 국제기구를 조직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의회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준을 거부했고, 결국 국제연맹은 미국이 빠진 채 출범해야 했다. 버락 오

바마 대통령 시기에도 미 의회의 견제는 왕성하게 작동했다. 2013년 10월에는 연방 정부가 임시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건강보험 개혁안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결과였다. 16일 동안 이어진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사전에 예정된 아시아 4개국 순방 일정을 취소했고, 미국 대통령의 체면은 여지없이 구겨졌다. 2016년 3월에는 대법관 한 명이 별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미국 공화당은 대법관 지명은 차기 대통령이 할 일이라면서 승인을 거부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8개월 동안 인준을 기다리다가, 트럼프 당선자 등장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퇴진했다. 미국 의회의 대통령 견제 사례를 몇 가지 거론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했다가 미 의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미 의회의 구미에 맞게 수정한 정책이 부지기수다.

미국 의회는 적극적으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지만, 전쟁 선포권은 미 의회가 갖고 있고, 전쟁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것도 의회 권한이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 가운데 일상화한 수단은 청문회다. 미 의회는 거의 매일 국무부와 국방부,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외교 정책 분야에서도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는 물론, 세입세출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에서 다양한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진행하고, 분야별 소위원회가 따로 청문회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미 의회 회의실과 복도는 거의 언제나 정부 당국자와 해당 분야 이해 관계자, 로비스트, 언론인 등이 북적대는 혼잡한 거리 양상을 연출한다.

미국 정치에서는 입법과 행정, 사법부 간에 권력 분립이 존재하지만, 입법부 내부에도 견제와 균형 장치는 존재한다. 요컨대, 하원은 다수결 원칙을 중시하고, 상원은 소수 의견 보호를 중시한다. 상원과 하원의 구성을 보면 이런 특성이 명확하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약 4천만 명이고, 와이오밍 주는 약 60만 명으로 인구 차이는 약 70배다. 이런 조건에서 하원 의원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53명을 배정하고, 와이오밍에는 기본 단위인 1명을 배정한다. 인구 비율을 볼 때 자연스럽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는 인구와 상관없이 2명씩 배정한다. 인구가 적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법안 처리 절차는 견제와 균형 원칙이 집요할 정도로 적용된다. 하원 의원이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상임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그리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다음에는 상원으로 넘겨져서 3번의 심의를 또 밟아야 한다. 상원에서 시작한 법안도 반대 방향으로 6번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상원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격렬하게 반대하

는 경우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등의 방법을 통해 의안 처리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여야 상원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트럼프, 자국 이익 저해하는 행동 어려워

트럼프 시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 될까? 트럼프가 한반도와 관련해 언급한 관심사는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 핵무장 허용 논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등이다.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보자. 트럼프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김정은과의 대화보다는 자신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비교할 때 협상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오히려 북한이 중국의 장난감이라면서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인식을 자주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열렬한 반항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다. 트럼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동맹 파기가 전제된 개념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할 경우 미국에서는 절대 반대 사안이 되는 것인데, 트럼프는 이미 한미동맹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인가? 사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91년 이후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고, 트럼프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

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분담금 인상을 갑자기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상당한 충격 파가 생겨날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무기 도입선 변경이나 주한 미군 비용 개념의 재설정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손실 발생을 예방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는 한미동맹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참고로 2014년 한국의 무기 도입 액수는 9조 원이고, 그 중에 미국산 무기는 8조 원어치였다. 미국 무기를 편향적으로 구입하는 배경에는 기술적 이유도 있겠지만, 정치적 이유, 즉 한미동맹을 고려한 계산이 있다는 점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우리는 물론 미국도 군사비 급증을 포함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군사 전략 변경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군은 공군과 해군의 무기 체계에서 빈약한 요소가 많고, 특히 인공위성 등 고가의 영상 정보 탐지 장비가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도 주한미군 철수는 아시아 대륙의 교두보를 상실하는 것이고, 심지어 동맹국이었던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서 적대국가로 변모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잠재적인 군사 기지를 상실하고, 중동 지역을 염두에 둔 대규모 신속 대응군 대기 장소도 잃게 된다. 지난 1976년 말 대통령에 당선한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군부의 격렬한 반대 등으로 실패한 사례는 지금도 다시 새겨볼 가치가 있다. 한미 FTA는 재협상의 길을 걷게 될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협정은 무역 분야에서 한국이 유리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무역 역조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재

협상에 대해 우리 정부도 불편하게 여기겠지만, 미국에서 산업계나 행정부 의견을 일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 재도약의 기회 삼아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가 언급한 관심사를 보면 미 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중심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고려해 물질적 이해관계에서도 이익의 균형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가 제기한 불만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불만은 사실 관계를 오해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때 일수록 차분하게 한미관계의 실상과 한국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요구 사항도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트럼프 등장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량 자체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한 단계 격상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1, 2년 뒤에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왕선택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국제정책실무 석사 학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2월 YTN 방송 기자로 입사해, 국내 정치 담당을 거쳐, 2002년 이후 통일부와 외교부 출입기자로 일했고, 2006년 이후 통일외교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했다.

‘위대한 부흥’ 꿈꾸는 중국, 독자적 대 한반도 정책 고민할 것¹

김홍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시진핑 시기 외교는 중국 외교사에 있어 큰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적 의미의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간으로 두 가지의 백년을 설정한 바 있다. 첫 번째 백년의 시기(1921~2020)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며, 두 번째 백년(1949~2048)은 중국 건국 100주년의 시기다. 중국은 2021년 시점까지 안정적인 중등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시진핑은 이 “중국의 꿈”을 이루는 새로운 30년을 여는 문턱에 들어서는 시기에 집권한 지도자이다. 2017년 늦가을에 개최될 제19차 공산당 대회에는 향후 5년(2018~2022)을 이끌어 갈 지도부를 선출한다.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현재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2022년까지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시기에 경제적 규모에서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이 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이미 IMF는 구매력 기준으로는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전략과 외교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일류의 부강한 국가로 변환시킨다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²

중국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전도상국’으로 인식했던 후진타오 시기(2003~2012)의 인식과는 달리 시진핑과 그 주변 핵심 대외정책 지도부는 ‘발전 중인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자아정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대외 정책 역시 이에 따라 재구성하려하고 있다.

1. 이 글은 2016년 12월 22일 현대중국학회와 성균중국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 시진핑은 2013년 3월 17일 국가주석으로 임명된 제12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연설에서 이 “중국의 꿈”이란 개념을 9차례나 언급하였다. 중국의 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http://baike.baidu.com/link?url=3tY8T4NTsvsHRAL3-uAF2-G_AttWNEvd-OZOpKNJY9YuWf0VcJalmN6eORaFc4emupVWZAOLSKY5eQ7ISbkK (검색일: 2014.7.27)



2016년 10월 27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시진핑(가운데)을 비롯해 집단지도체제의 중심인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17년 관리 위주의 대외관계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트럼프의 미국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연합

세계 일류국가 향한 ‘중국의 꿈’

시진핑 시기 새로운 대외전략의 핵심은 2015년 공개한 일대일로(一帶一路)라 명명한 전략구상에 놓여있다. 중국의 대외전략 방향은 현재 드러난 바로는 동관(東管), 서진(西進), 남개(南開), 북화(北和)로 요약할 수 있다. 동쪽은 점진적인 대응과 관리, 서쪽은 적극 진출, 남쪽은 새로운 영역확장, 북쪽은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00주년인 2049년을 전후해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가장 중점을 둔 곳은 서쪽이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일대일로 구상이 충돌한 접점은 남중국해였다. 최근 발생한 중국의 미 해저 드론 탈취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가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외교에서 주변국 외교가 전략적 수준에서 구상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도 시진핑 시기부터라 해도 좋을 듯하다. 2013년 10월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래 최초로 당 최고지도자인 시진핑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출석한 ‘주변국외교업무 좌담회’를 개최하여 친(親)·성(誠)·혜(惠)·용(容)이라는 대주변국 외교 이념을 천명했다.³

2016년 중국의 외교는 주변국 외교에서 최대의 좌절과 성공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최대 좌절은 그간 공들여 온 한국이 사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

3. 중국 측에서 이를 잘 정리한 글은 邢麗菊, 「從傳統文和角度解析中國周邊外交新理念: 以親, 誠, 惠, 容為中心」, 『國際問題研究』 2014年 第3期, pp. 9-20.

이 4차, 5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중국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제정치 게임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있었다. 한편 성공적인 측면은 그간 중국과 소원하거나 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급속도로 중국에 편승하는 우호적 노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외 변수 관리 나설 중국

중국의 왕이 부장은 2017년 외교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⁴ 첫째, 대국(大局) 의식을 강화하고,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글로벌 협력 고위층 포럼과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의 외교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 셋째, 전략적 신탁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의 평화적 과정 추진 및 새로운 협력 전망을 개척하고,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강대국 관계의 틀을 구축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확대한다. 넷째, 민생을 위한 실천에 취지를 두고 ‘해외 민생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국가 발전과 개혁 개방에 더 이바지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외교는 새로운 장정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새로운 공헌할 것”이다.

2017년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공세적이거나 주도적이기 보다는 관리형의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손상을 가

져오는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일 외부에서 시진핑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거나 국가의 위신과 관련된 사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공식화하거나, 중국 스스로가 이를 확신할 경우에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2017년 중국 외교가 관리 위주의 대외관계를 희망한다고 할지라도 트럼프의 등장은 중국의 외교가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중국은 당연히 트럼프의 도발에 강력 반발하면서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국민들에게 중국이 얼마나 강력해졌으며, 자신의 리더십이 중국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 할 것이다.

미중이 구조적으로 전략경쟁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제4차 북핵 실험 이후를 계기로, 미국은 사드 이슈의 부각을 통해 이제는 북핵과 북한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중국은 이해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미중간 다른 이슈와 북핵 이슈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미중간 목적을 파기한 조치이다.

트럼프의 대중외교는 현재 거칠고, 조악하다. 따라서 2017년 미중 관계는 상당한 파고가 예상된다.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견제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중국에 안겨주고 있다. 미국이 사드를 한미 지역동맹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중국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포대 이상의 사드 추가 구매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비용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중국 측에 교섭카드로 sell-out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중관계를 격리시키고 한국을 연루시키는 전략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현 상황대로라면, 한국은 아마 적어도 2017년 하반기(본래 예정은 12월까지)에는 사드 1포대를 배치할 것이다. 이 경우, 한중 관계는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미중관계, 상호의존 보다 독립적 방향 예상

중국은 2014년 제18차 당 대회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제도화를 논의한 바 있다. 중국 경제가 점차 내수형, 서비스 중심형의 경제로 급속히 전환중이다. 중국은 그간 성공적으로 경제 구조전환을 수행해 왔다. 2006년 거의 70%에 달하던 무역의존도를 이제 30%대로 낮췄으며, 향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점차 자기 완성형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중이다. 국내경제에서 트럼프도 보호주의로 가지만, 중국 또한 보호주의로 가는 모양새인 것이다.

미중 양국관계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의 방향으로 진전되기 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상호 초국가적인 사안들과 얽혀있어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전면적인 외교적·군사적 대항을 추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2017년의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는 공언한대로 중국에 대해 경제적 면에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이에 순응하지 않고 반발할 것이다. 다만 아직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갈등구조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훨씬 더 독자적인 대 한반도 정책을 가져가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이후 중국이 오

히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해법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이고, 실제 대북정책 전문가나 북한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2017년은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책 보다는 관리 방안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국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할 개연성이 크다. 중기적으로는 ‘핵동결과 점진적인 비핵화’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추후 혹시 국내정치적으로 물리는 상황이 온다면 북한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둘 공산이 있다. 핵동결을 허용하는 안에서 미국·중국·북한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대외정책은 비교적 예측가능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은 변화 수위가 높다. 그리고 한국 스스로의 한국 변수 혹은 우리의 취약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가 당장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의 안보태세를 잘 점검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대한 정책 결정은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대외정책, 중미관계, 중일관계, 북·미·중 관계 모두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여러 의견을 종합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 구하는 ‘민주’와 ‘숙의’의 정치 및 정책 결정 체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대외 여건이 점차 불확실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민주정치”의 확립이 우리가 지닌 가장 중요한 안보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홍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외교원과 성신여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4. <http://kr.people.com.cn/n3/2016/1223/c203282-9158469.html> (검색일: 2016.12.23.). 저자의 수정 포함.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로 미중 갈등의 한반도 영향 최소화해야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고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7년에는 미중 갈등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강력 비난하면서 중국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취임 이전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공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시진핑도 신장된 국력과 군부 강경론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문제 등 핵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트럼프와 거래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수교 이후 근 40년 동안 미중은 양국 간 갈등이 폭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가 계속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미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초기 심화될 미중 갈등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미중은 무역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안보전략 및 대만문제 등 전방위에 걸쳐 충돌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경제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이유의 상당부분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가고 수출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인민폐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그는 중국 상품에 대해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중국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일자리와 재화를 되찾아 오겠다고 버리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미국산 쌀, 옥수수, 밀 등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이에 중국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미국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여 보복했다. 보잉사와의 항공기 구매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시사



트럼프 이후 미중 간의 갈등심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사진은 2015년 9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연합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3,500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간 경제력 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경제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발동하면 미중 간 경제통상관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트럼프가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신행정부는 중국을 군사안보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온 힐러슨이 국무장관으로 발탁되었고 군 출신 강경파 인사들이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등 요직에 대거 등용되었다. 중국 지도자들의 눈에는 2001년 부시 행정부 1기의 네오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 미 신행정부가 러시아 및 동맹국과의 관계

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70년대 이래 미국의 세계전략 기조가 소련/러시아의 팽창 저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데에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G2로 부상한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도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포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후 아베 일본 총리를 외국 지도자 중 처음으로 만나준 것이나 오바마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온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여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미중 수교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중국은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을 핵심 국익에 대



러시아는 친 러시아 성향의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가 차기 미국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환영했다. 사진은 2012년 6월 틸러슨(오른쪽)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모습. ©연합

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자,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을 지원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수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격기를 띄워 대만 상공을 비행하도록 했다. 이는 차이잉원 대만정부에게 독립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동시에 미국 신정부에게도 신중한 대만정책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군사행동이었다.

트럼프가 미국 군수산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대만에게 군사무기 판매를 대폭 확대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이 심화되고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남중국해도 미중 군사충돌의 무대가 될 소지가 많다. 집권 2기를 맞아 시진핑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여 해양실크로

드의 앞마당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 강화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15일 중국 해군이 필리핀 수빅만 인근 해역에서 미국 무인수중 드론을 포획한 데 대해 트럼프가 보여 준 강경한 비난을 고려할 때,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군사기지화 조치는 미중 군사대결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중후반에 이르러야 갈등 완화 가능성

이처럼 트럼프 집권 초 미중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 신정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미중은 갈등관리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인권문제와 이념을 중시하지 않고 실리를 중시하는 협상가이기 때문에 무역 갈등, 대만문제, 남중국해문제 등 모든 현안을 중국과 주고받기를 통

해 처리해 나갈 것이다. 중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신행정이 실리차원에서 중국 주도로 창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할 것이라는 점도 미중 갈등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중국 역시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안정적 관계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시진핑이 보낸 축전과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는 트럼프에게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협력적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의했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없이는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全面小康社會)’ 실현이라는 100년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진핑은 잘 인지하고 있다.

요컨대 트럼프-시진핑시기 미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갈등이 더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중 사이에는 거의 100개에 이르는 소통채널이 가동되고 있고, 양국 지도부가 쌍무 현안 및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레이건과 부시 등 중국을 적대시한 행정부가 집권했을 때에도 초기에는 미중관계가 악화되었다가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개선되어 왔다. 트럼프와 시진핑도 자국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실리주의자라는 점에서 양국 간 갈등현안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미중 충돌 무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트럼프 집권 이후 전개될 미중관계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등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중 경쟁 심화가 우리에

게 선택을 강요받게 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미국은 대중 포위망에 적극 가담하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은 경제수단과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국의 입장을 편들지 말도록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국가안보와 경제이익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중 두 나라 모두와 잘 지내야만 한다. 따라서 미중 갈등을 한반도로 불러들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일차적 과제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외교안보 보좌진들이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개진해 왔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조치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과도한 대북 제재가 초래할 혼란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중 간 협력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도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미·중 간 북핵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신행정이 미 군수산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주고 대중 군사 견제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드 한국 배치를 서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에서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비판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신상진은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 NSC에서 동북아평화정책 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북한 선전의 진화, 드론과 프롬프터

변영욱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최근 국내 언론사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드론(Dron)이다. 하늘 위 카메라가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신문사와 방송사가 헬기를 사용하거나 크레인을 이용해야만 가능했지만 높은 비용이 문제였다. 하지만 카메라를 포함한 드론 가격이 30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유행처럼 드론이 도입되고 있다.

공중에서 땅 위를 촬영하는 것은 한국과 북한 모두 금지 또는 정부 당국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우선 한국의 경우를 보자면, 경복궁을 하늘 위 정 가운데서 찍은 사진이 없다. 광화문대로 양쪽에 포진한 높은 빌딩 말고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 말이다. 수만 명의 사진작가와 기자들이 수십 년간 한국을 기록해왔지만 경복궁을 정 가운데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 없는 것이다. 뒤편에 있는 청와대 때문에 부근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헬기로 촬영하던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드론이 대중화된 지금도 서울 광화문 부근은 항공촬영금지 지역이다. 최근 판매되는 드론은 아예 이 지역에서는 비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파수가 조정되어 판매된다.



북한의 경우 항공촬영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전 세계로부터 포위되었고 생각하는 체제에서 항공사진은 '이적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 언론 역시 드론을 적극 활용해 인민들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 중이다. 공중에 뜬 드론은 계획에 의해 완성된 높은 건물을 보여준다. 새로운 구경거리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퍼포먼스를 홍보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해 시각적 스펙터클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건물 또는 하늘 위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는 특별한 주인공이 없다. 누구나 다 작은 크기로 보인다. 이런 식의 전경 스타일 사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 몰두하게 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주인공이 없다. 2016년 한국 정치의 상징이 되고 있는 광화문 촛불 시위 사진 역시 그렇다.

드론이 찍은 평양의 새 건물 모습 사진이 주는 효과도 그렇다. 웅장함과 함께 보는 사람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준다. 북한에서 선전의 방식은 진보하고 있다.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13년 1월 1일 김정은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것이 1994년 김일성 주석 생전 마지막 신년사에 이어 19년 만의 일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5분간 방송된 연설에서 그는 A4 용지 아홉 장 분량의 연설문을 읽었다. 정면을 거의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원고를 읽었다. 한국

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에 대해 '능력 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김정은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것은 정확함을 확보하기 위해 시선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말은 곧바로 역사가 되고 정책이 되므로 원고를 한 자라도 틀리게 읽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비판이 북한으로서는 신경 쓰였을 것이다.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때 김정은은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신년사를 발표했지만 말실수는 없었다. 1~2년 만에 김정은의 연설 실력이 높아진 것일까? 그것보다는 카메라 앞에 원고가 자동으로 보이는 프롬프터(Prompter)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프롬프터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게 편집되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인들의 경우도 가능한 프롬프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유튜브를 통해 보여진 현장



화면에서 프롬프터를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카메라 앵글이 최대한 프롬프터가 보이지 않도록 잡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전체를 빠른 카메라 워크로 보여주거나 연결하는 얼굴만 클로즈업 했고 프롬프터가 잘 보이는 중경 크기의 화면은 거의 넣지 않고 편집했다.

한국의 경우,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경부터 대통령 연설에는 프롬프터가 활용되고 있다. 정현규의 책 『글로벌시대의 의전행사 성공전략』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선서 모습은 모두 오른손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읽고 있는 사진이다. 프롬프터가 없던 시절 법이 정한 대통령 선서문을 오류 없이 읽어야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시력이 좋지 않아 프롬프터를 얼굴 가까이에 두고 있으며 그래서 화면에 자주 비쳤다. 한국 대통령의 프롬프터 관리는 청와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외주 업체에 맡긴다. 해외 순방을 갈 때 업체 관계자도 함께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영욱은 현재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에 재직 중이며, 청와대 출입 및 일반 사진 취재를 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1호 사진의 변화'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남북한 최고통치자의 보도사진 프레임 비교'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로는 "김정일.jpg-이미지의 독점", "위대한 장군 모습을 만드는 방법" (일본 소시사 출판), '김정은.jpg-북한 이미지 정치 연보기' 등이 있다.

연하우표를 통해 바라본 남북 새해 축하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아

이상현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

연말연시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희망을 꿈꾸느라 가슴이 설레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각종 송년회와 신년회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또 한 편지와 카드를 쓸 기회가 많지 않은 인터넷 시대임에도 이 때 만큼은 각종 연하장이 오고가는 정감어린 시기이기도 하다.

남과 북의 우표에서도 밝아오는 새해에 대한 부푼 기대를 담은 우표들이 발행되어 왔다. 새해를 축하한다는 의미의 '연하우표(年賀郵票)*'가 그 주인공이다. 남과 북은 각각 1957년과 1977년 최초의 연하우표를 발행했다.

우선 발행 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남측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발행되고, 북측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행되고 있다. 남측의 경우 1970년대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도안이 반영된 연하우표들도 종종 발행되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연말 분위기를 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며, 이에 따라 12월 초에 발행되는 것이 전통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 북에서는 '새해우표'라고 부르는데 기술상 연하우표로 통칭하고자 한다.

남측의 연하우표 도안을 살펴보면, 초기 크리스마스 이미지와 함께 연날리기, 팽이치기와 같은 전통문화 소재와 12간지 동물들을 상징하는 도안들이 섞여 발행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동물도안으로만 발행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12간지의 특성상 12년을 주기로 동일한 스타일의 우표들을 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2년간의 우표들을 모아놓고 보면, 마치 같은 시기에 그려진 시리즈 우표처럼 보인다. 그리고 2002년부터 야광우표로 발행되어 불을 끄고 보면 야광 잉크로 인쇄된 그림이 도드라지는 재미있는 우표형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북측은 연하우표 발행 초기인 1970년대 주로 정치적 구호주의 연하우표를 발행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12간지 동물과 풍경 등 비정치적 도안으로 주제를 바꾸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선전물 형식의 연하우표들이 나타났고,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 비정치적 소재들이 함께 발행되고 있다.

새해에 대한 희망은 남과 북의 차이가 아닌, 인류 공통의 마음일 것이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남과 북의 소용돌이 희망찬 닭의 울음처럼 뻗어나가기를 바란다.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을 역임하였고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민화협 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이다.

남측

- 01 최초의 연하우표로 액면은 당시의 화폐단위로 25환이다. / 1956.12.20
- 02 1968년 맞이 5원짜리 연하우표, 숫자 5 다음의 밑줄 그어진 00은 당시 전단위를 표시하는 액면 체계였다. / 1967.12.10
- 03 용띠 해인 1976년 맞이 연하우표 / 1975.12.1
- 04 소띠 해인 1985년 맞이 연하우표 / 1984.12.1
- 05 개띠 해인 1994년 맞이 연하우표 / 1993.12.1
- 06 토끼띠 해인 2011년 맞이 연하우표, 야광우표로 발행되었다. / 2010.12.1
- 07 2017년 맞이 연하우표, 금박으로 인쇄된 수탉 / 2016.12.1

북측

- 08 북측 최초의 연하우표 / 1977.1.1
- 09 정치적 구호가 들어간 1979년 연하우표 / 1979.1.1
- 10 1985년 맞이 연하우표 / 1985.1.1
- 11 달과 토끼가 그려진 연하우표 / 1987.1.1
- 12 새천년 맞이 연하우표 / 2000.1.1
- 13 평양의 설경이 그려진 연하우표 / 2010.1.1
- 14 2015년 맞이 연하우표 / 2015.1.1



뿌리가 '같은' 나무, 문화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다

1020통일공감기자단 권성우 · 박윤수 · 송하은 · 황지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1020통일공감기자단은 남북 관계 전문가, 민화협 관계자 등과 함께 연변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동북아문화교류 공동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연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학술회의는 민화협 정책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와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예술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열렸다.

약 2시간 반을 날아 도착한 연길 시내에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간판이 즐비했다. 버스 터미널에는 '버스역'이라는 표기 대신 '빠스역'이라는 표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자동차나 건물도 한국의 것과

비교해 오래된 느낌이 난다. 1950년대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매체를 통해 접하던 북한의 모습에 중국 느낌이 합쳐진 것 같기도 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다. 기자단이 4일 간의 일정 동안 머문 곳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주도, 연길이다. 기자단은 이번 일정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산 우리 선조들이 만든 역사의 흔적과, 뿌리가 같은 조선족 동포들의 현재의 삶, 그리고 남과 북, 중국 동포 등 우리민족의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통일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질성 극복보다 차이에 대한 인정으로 새로운 통일문화 만들어야

28일 오후, 이번 일정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동북아문화교류 공동학술회의」가 연변대학교에서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동북아의 소통”을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는 남북관계 전문가, 민화협 관계자, 연변대 교수 및 학생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부로 나뉘어서 개최됐다.

1부는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영호 강원대학교 교수, 김석주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최철호 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이 발표를 하고, 토론에는 남영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안국산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교수, 김종수 송실대 겸임교수, 서보혁 서울대 HK연구교수가 참여했다.

박영호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중 간의 경쟁과 협력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전략은 동북아 질서 변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주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신앙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 대마도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동북아 환동해 통로’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철호 연변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은 “문화관광 협력은 동북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협력 중의 하나”라며 “북한의 금강산, 한국의 부산, 일본의 도야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관광 크루즈상품을 개발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지중해 다음으로 큰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진행된 2부는 “남·북·조선족의 민족문화

변천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현동일 연변대 경제관리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발표에는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원장, 장익선 연변대 예술학원 교수, 노귀남 연변대 객원연구원이 참여하고, 토론에는 황의철 민화협 문화예술위원장, 배인석 민화협 문화예술위원장, 박춘선 연변가무단 부단장, 이훈 연변대 예술학원장, 정희섭 연변대 초빙교수가 참여했다.

박영정 팀장은 발표를 통해 남북 간 이질성 극복과 새로운 통일문화 형성을 위해서 먼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새로운 자양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남북 간 교류 협력과 접촉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의미 있는 통일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장익선 연변대 예술학원 교수는 연변에 사는 전문가들도 우리 문화를 잘 모르기에 우리만의 개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고, 중국 조선족의 문화는 부정할 게 아니라 후세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이 지역에 사는 조선족의 문화를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노귀남 연변대 객원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북부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의 사회·경제 체제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번 북부지역 피해 복구를 지켜보니 지금의 북한 사회는 당 중심 국가로 복귀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히고 “북·중 경제 협력과 교류에 주목하고 남·북 민간교류를 회복하여 미래의 전략을 만드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문화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새롭게 창조되고 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질성을 너무 강조하며 극복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로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발표와 토론을 지켜보며 1020통일공감 기자단은 남도 북도 아닌, 타국의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연변 동포들의 기개를 느낄 수 있었



용정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했던 교실이 재현되어 있다.



이번 일정에 함께한 1020 통일공감기자단.

다. 삶의 터전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지켜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를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뿌리 '같은' 나무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학술회의와 더불어 기자단의 심장을 뛰게 한 곳은 연길 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북중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한 일이다. 기자단은 역사문화탐방의 일환으로 조선족자치주 박물관, 대성중학교, 운동주 생가를 비롯하여, 북·중·러 접경 지역도 함께 방문했다.

먼저 방문한 연변 조선족자치주 박물관이다. 이곳 '천추의 얼'이라는 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대한 조선족의 행적이 정리되어 있다. 독립투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 청산리대첩에 관한 설명과 간도 땅에 조선족 자녀들의 교육과 항일민족정신교취를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한 이상설, 시인 운동주와 이육사 등을 비롯한 독립열사들에 대한 설명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식민지 시대, 지금보다 더 암울하고 추웠을 이곳에서 활동한 이들의 이름은 일행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

하는 것이리라. 우리에게 낯익은 이 이름들은 이 곳 연변의 조선족에게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다.

그 다음 방문한 곳은 대성중학교의 교사(校舍)가 남아있는 용정중학교이다. 대성중학교는 시인 운동주의 모교이다. 역사적으로 대성중학교가 위치한 용정은 우리나라 민족교육의 근거지였다. 헤이그특사로 잘 알려진 이상설이 서전서숙을 설립한 곳이며 이동휘 독립운동가가 활동한 본거지이다. 대성중학교 교사(校舍)는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건물과 분리되어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곳에 과거 운동주가 공부 했을 듯한 교실을 재현해 두었는데, 이 작은 교실에서 몇 십 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했고 그들 사이에 운동주 시인이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친근하게 느껴졌다. 난로 앞에 모여앉아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을 운동주 시인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명동촌은 과거 조선에서 이주한 동포들이 만든 조선족 동네로, 밝을 명(明)자와 동녘 동(東)자로 이루어진 이름에는 '동쪽을 밝히다'라는 표면적인 뜻과 함께 '조선을 밝히다'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했으며 운동주 시인이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안에는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곳

의 맑은 하늘과 땀을 아리게 하는 차가운 바람은 당시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그에 따른 기백, 시련마저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듯 했다.

국경? 그거 그냥 선 하나야

중국에 온지 3일째가 되는 날은 도문과 방천 지역을 방문했다. 도문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로 두 만강을 사이에 끼고 있다. 두만강이 국경 역할을 하는데 강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수시로 국경이 조금씩 바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살아 움직이는 국경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곳은 비교적 남북 국경보다 경계심이 덜한 느낌이다. 강물은 군데군데 얼어있었지만 분위기가 삼엄하지 않아 묘한 느낌이 었다. 중국의 도문과 북한의 남양시를 잇는 다리를 걸었다. 다리 위를 걸어 중간에 그어져 있는 국경선 앞까지 갔다. 분명 눈으로 생생히 보이는 북한 땅이지만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저 멀리 북한 건물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북한 군인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육안으로 보였다. 멀리서 그들이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연 저들은 우리가 남한에서 온 사람들인 걸 알고 있을까. 우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다리 근처의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본 북한 '남양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착시를 주었다. 이론적인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산가족의 고통,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너는 위험의 강도를 우리가 아무리 책으로 공부한들 알 수 있을까? 실제로 국경 지대에 와 보니 가까운데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뼈저리게 와 닿았다. 기자단은 단언한다. 책보다 값진 경험을 했다고.

방천은 북한, 중국, 러시아 삼국의 접경지이다. 이렇듯 눈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살아가는데 어찌서 그렇게 서로를 경계하고 미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멀리 서울에서



중국 방천에서 바라본 북·중·러 접경지역.

는 느낄 수 없었던 인간애였다.

연길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억양은 북한 사투리의 억양과 매우 비슷하다. 그만큼 연변 조선족들이 북한 주민들과 많이 교류한다는 의미다. 4일 간의 일정을 함께했던 김석주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장은 "조선족 동포들이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책임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비록 중국 땅에 살고 있지만 조선족 학교에 자녀를 보내 한국말을 배우게 하는 등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연변은 통일의 오래된 미래가 있는 곳이었다. 이미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 아직은 국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이번 일정을 통해 중국과 북한, 나아가 러시아와 남한 문화까지 접하며 살아가는 조선족들이 앞으로의 통일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시절에 결의와 의지로 독립이라는, 어쩌면 어려워 보였던 목표를 향해 운동주 시인과 그 외의 독립 운동가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소망하고 살았듯 우리 또한 통일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품었음에도 결의와 의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기자단은 일정을 마무리했다. 🌀



현장 1

통일공감포럼 - 제4차 통일공감대화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편집부



민화협의 특별기구 통일공감포럼(공동대표 김천식, 차경애)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를 주제로 제4차 통일공감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기정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과 심윤조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대담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세계질서와 이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 변화, 새로운 한미관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해법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트럼프 시대에도 아시아 중시 정책 이어질 것 중국 영향력에 대응해 일본 역할론 부상 예상

김기정 원장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미국 경제의 부가 상승부에만 고여 있고, 중하층까지 떨어지는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미국 대선 이후 세계질서에 대해서는 “트럼프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전후 미국이 주도한 질서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계기”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 온 세계질서, 자유무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온 군사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당장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해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며 아시아 중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심윤조 전 의원은 “역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의 반복”이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트럼프는 “경제를 최우선시하면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안보적으로는 신고립주의를 택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미

국이 과거처럼 경찰국가로서 무역 질서를 이끌어가지는 않겠지만, 제한적 범위에서 여전히 패권국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 이후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미국의 중국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일본에 힘을 실어주어 일본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고, “미일의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을 빼지는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을 지속하고, 이로 인해 미중 간 대립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동맹, 가치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넘어가는 변화추세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김기정 원장은 “우리가 그동안 한미동맹을 전략동맹 또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라고 표현”해 왔는데 이제는 가치라는 단어가 실종되고 “가치에서 전반적인 이익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추세에 트럼프가 하나의 신호”를 보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왔는데 문제는 “한미동맹을 일정정도 재조정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심윤조 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정책검토 기간에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관련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냉정하게 미국과 한국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만약 우리의 분담금을 더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자주국방을 위해 더 많은 군사적인 협력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담자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가능성의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대북정

책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전 의원은 “북한이 지난 10월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후 별다른 조짐이 없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비즈니스맨이라 대화에 응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자립형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방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 등을 척결하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 국방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충함으로써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정 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확신에 찬 전망은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변화가 없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트럼프를 통해 새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분단 문제 당사국인 우리가 지난 9년간의 대북 강압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새로운 틈을 만들어 주변국을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익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변화되는 흐름에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어 우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천식·차경애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민화협 회원단체와 통일공감포럼 회원, 학생 및 남북관계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흡수통일론 대신 점진적·평화적 통일방안 재확인해야

편집부



지난 12월 23일 민화협 통일공감포럼이 주관한 ‘통일공감 특강’이 개최되었다. 이 날 특강은 ‘2017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권은민 통일공감포럼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차경애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 이정은 민화협 공동의장, 김영만 서울신문사 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차경애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 통일의 길은 다소 더 험난해지겠지만,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기에 늘 따스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프로 바둑기사 중 한 분은 슬럼프가 올 때 자신의 초기 포석집을 보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그 마음을 다잡는다고 한다”며 “‘통일공감’이라는 말이 현재와 유리되어 있

는 듯 느껴질 수 있지만, 포석집을 차근차근 읽어가는 기사의 태도처럼 통일공감포럼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기초부터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재확인 필요

박명규 교수는 “2017년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심정이 다소 착잡한데 이는 단절된 남북교류, 고조된 북한의 군사도발, 한중관계 냉각,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 등 어는 것 하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초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공식적 통일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통일 추구가 핵심인데, 지난 수년간 이 기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만한 상황이 많았다”며, “대북압박에만 치중하

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국민들 사이에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흡수통일 불가피론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파트너로 여기고 함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과정을 밟아간다는 전제가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원칙과, 흡수통일을 정책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단계적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초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 점진적인 방안의 중간단계에 대한 재구상 또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중간단계에는 기능적 통합론에 근거한 실질적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력 대치로 인한 적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구상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만의 대북 레버리지 통해 국제사회에 대안 제시해야

이어 박명규 교수는 복합적 통일역량의 준비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 뿐만이 아닌 위기관리능력, 다양성 포용능력, 비전제시 능력, 주변국의 동의를 유인할 공공외교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 사회의 스마트 파워”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편익이라는 경제론적 가치를 넘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 연대의식, 국민소통, 정책거버넌스 차원에서 통일의 비전이 설정되고 수준 높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민족공동체의 미래전략을 추진해가는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이 동북아의 지역적 통합, 평화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국제사회의 갈등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외교정책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손꼽은 것은 정서와 감정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박 교수는 “통일을 한다는 것은 정서와 계산이 함께 작용하는 과제”라며, “현재 남북이 통일에 대해 공유하는 정서적 핵심자원은 바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지만, 이 정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들며 “특히 2, 30대 젊은 층에서는 통일의 이유가 ‘같은 민족이라서’라고 답하는 비율이 윗세대보다 현저히 낮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족적 유대나 과거의 직접 경험에 의한 한민족이라는 정서가 희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주민과 한반도 미래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통적 민족의 정서를 넘어서는 자산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무리 지으며 박 교수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단절된 남북 간 교류의 접점을 찾고 다시 교류의 동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에 모든 대북정책을 연동시키는 방식은 재고해야 하며, 비핵화는 분명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다른 정책의 목표들도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와 영향력, 주도권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 국제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내년 대선에서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전환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며,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민족화해의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민화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3
제14회 민족화해상 시상

‘인명진 목사’, ‘사단법인 평화3000’ 수상 담대한 실천으로 남과 북을 이을 것

편집부



2016년 12월 20일 민화협과 경향신문이 공동주최하는 제14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이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 민족화해상은 통일준비 부문에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목사), 민간교류 부문에 사단법인 평화3000(상임대표 곽동철·신부)이 선정되었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 이운배 심사위원장(홍사단 이사장)은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인명진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원로 종교지도자로 그동안 남북교류와 화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긴급지원 마저 여의치 않을 때에도 숭한 돌파구를 마련해 민족화해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분단과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헌신과 ‘인도적 대북지원이 가장 중요

한 통일준비’라는 인 목사의 담대한 실천이 어려운 남북관계의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평화3000은 2003년 출범한 이후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기여해왔으며,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개발구호사업도 함께 전개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운배 심사위원장은 북한 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와 영양지원, 농업지원, 생활개선지원, 그리고 종교와 체육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등 13년 동안 다방면에서 평화3000이 펼쳐온 수고와 헌신은 화해와 평화, 통일의 희망으로 거듭났으며,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열어 온 평화3000의 실천과

그 실천의 원동력인 평화3000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축사를 통해 공자의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 하늘에 죄를 짓게 되면 기도할 곳이 없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인명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원들, 곽동철 신부와 평화3000 후원자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홍 대표상임의장은 수상자들과 민화협 등의 노력으로 마련된 작은 토대가 마침내는 남북이 서로 피 흘리지 않는 다툼이 없는 통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대신했다.

남북을 잇는 다리가 되어 하나 된 한반도 만들어 나갈 것

이어 이동현 경향신문사 사장은 남북이 북핵문제, 사드배치 등으로 이렇다 할 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 있다며, 그 때문에 민족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 번영에 앞장 선 인물과 단체를 발굴하고 업적을 알리는 민족화해상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 더 빛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한 인명진 목사와 평화3000의 지속적인 노력이야말로 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만델라 대통령이 강조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야기하며,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상패 수여 이후 인명진 목사는 지나간 몇 년 동안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을 받게 부끄럽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민족화해와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통일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그 중 대북 인도적 지원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시작이자, 밑받침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목사는 언젠가 꼭 이루어 질 남북화해와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을 기다리며 또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평화3000 곽동철 상임대표는 과거 인도지원, 사회문화교류사업, 일반 시민들의 대규모 방북 등의 사업을 통해 평화와 통일은 민간 차원의 교류, 즉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며,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감의 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남북은 계속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화3000이 민족화해상의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민족화해를 위한 일에 앞장서며 남북 민간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수상의 소감을 대신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해 이동현 경향신문사 사장, 김덕룡 민화협 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정배 국회의원(국민의당), 김영만 서울신문사 사장, 민화협 이종수·이승환 공동의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용선·이수구·김문찬 공동대표, 강영식 사무총장, 평화3000 박창일 운영위원장과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의 이운배 심사위원장, 김훈일·박명규·이영옥 심사위원 등 90여 명이 참가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다.

한편,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는 이운배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권미혁(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훈일(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박명규(서울대 교수),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주간), 이성현(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 민화협 공동의장), 이영옥(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인성(원불교 사회문화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차 회원단체 간담회 “미국 신 정부 출범과 한반도”



민화협은 11월 16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2016년 제3차 민화협 회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민화협 회원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상현 박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할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으며, ‘Shy Trump’ 현상(트럼프 지지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음)에 따른 숨은 표가 예상보다 많았고, 미국 내 반세계화 정서와 변화를 원하는 열망이 강했기에 오랜 민주당 집권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배경으로 기득권적 이미지가 강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박사는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세력(중국, 러시아 등)이 부상함에 따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그 힘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America First(미국 우선)’ 기조와 같은 신고립주의 노선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안보 불안 및 외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미국의 신고립주의 노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아시아 내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박사는 트럼프는 특정한 이념보다는 실리에 따라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달리할 수 있고, 주변 인물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이 분명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재만으로 비핵화 달성이 어려운 자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재 출구전략으로 남북 대화와 접촉 재개의 필요성을 민화협과 같은 민간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화협 제3차 통일정책포럼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진단과 남북관계”



2016년 12월 8일,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제3차 통일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포럼은 민화협 정책위원회의 하반기 정책연구 과제인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진단’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북한정치와 남북관계, 북한경제 상황과 시장화,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 ‘북한정치와 남북관계’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각각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정치”, “김정은 시대 병진노선과 군사분야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 진행된 2세션 ‘북한경제 상황과 시장화’는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경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 시장화”를,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

구위원이 “북한의 대외무역 실태와 전망”을 발표했으며, 장형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마지막 3세션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은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정은미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강호제 NKtech 큐레이터,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이 각각 김정은 체제의 사회문화 정책,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 변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북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발표했고,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민화협 홍사덕 대표상임의장, 이승환, 송광석 공동의장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통일정책포럼은 김정은 체제 5년의 주요 분야별 변화와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우리의 과제 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한편, 민화협 정책위원회는 통일정책포럼에서 발표와 토론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민화협 청년미래위원회 “특 터놓고 통일 특(TALK)”



민화협 청년미래위원회는 2016년 ‘특 터놓고 통일 특(TALK)’이라는 타이틀로 통일토크와 통일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특 터놓고 통일 특’은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통일 토크’를 표방하며 11월 24일에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청년미래위원회 소속 단체 및 민화협 회원단체의 청년 실무자와 대학생 회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하여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각자가 가진 생각을 공유했다.

통일 토크는 ‘북핵문제: 과거 그리고 현재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전문가 게스트로 초대된 김종수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교양학부) 겸임교수의 북핵문제를 둘러싼 과거 주요 사건 브리핑으로 그 시작을 열었다. 최용선 KYC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토크에는 안승혜 대한불교청년회 총무간사, 원유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 위원장, 대학생 박운수 학생(고려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박채원 학생(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협력학과 4학년)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다양한 배경과 위치에서 자신이 바라본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

진했다.

이어진 난상 토크 시간에서는 청중들의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 개진이 잇달았다. 최근 청년 세대의 북핵문제에 대한 무관심 현상, 미국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 핵개발 억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패널과 청중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특 터놓고 통일 특’은 “당장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골몰할 수밖에 없기에 소홀해지지만,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최용선 공동대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 ‘특 터놓고 통일 특’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을 자유로운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영화 <보고싶다>를 함께 감상하는 ‘영화 상영회’로 진행되었다.

영화 <보고싶다>는 ‘2015 통일부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낸 영화로, 서은아 감독의 <러브레따>, 윤재호 감독의 <히치하이커>, 장은연 감독의 <소년, 소녀를 만나다> 등 3명의 신예 감

여성평화통일기행 ‘평화의 섬 교동’에서 평화와 통일을 잇다



독들이 만든 중·단편 영화로 구성되었다.

영화가 끝난 후 감상평을 함께 나누던 한 관객은 “전쟁이나 그 과정을 겪었던 가족들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러브레따>를 보며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소년, 소녀를 만나다>를 통해 통일 이후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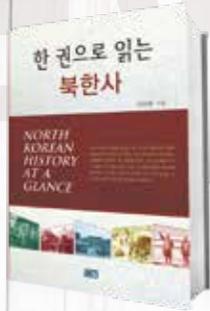
한편, 참가자들은 스크린 안의 자유로운 통일 상상력이 현실로 다가오길 기대하면서, 통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꾸준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민화협 여성위원회는 11월 9일 분단의 아픔과 망향의 염원이 깃든 강화도 교동 및 일대를 방문하여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여성평화통일기행’을 진행했다.

이 기행에는 여성위원회 소속 단체와 민화협 후원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개풍군을 조망하는 연미정, 연백을 조망하는 강화평화전망대, 6.25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생존을 위해 상권을 형성한 교동 대룡시장, 고향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교동망향단 등을 방문하여 각 장소에 깃든 실향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다.

통일기행의 백미는 강화도에 정착한 실향민 1세대 여성들과의 스토리텔링 시간이었다. 먼저, 교동의 역사를 김영애 새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가 다큐멘터리 영상과 함께 짧게 소개하였다. 이어진 여성실향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참가자들은 그들의 지난한 세월을 청취하고, 질문하며 전쟁의 참화 속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삶에 공감하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들이 평화를 일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었다.



한 권으로 읽는 북한사

이신재 | 오름 | 2016. 9

그동안 평범한 시민들은 물론 북한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이들에게도 북한은 다가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물론 지금도 북한은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와 공존의 대상이자 향후 통일을 이뤄야 할 파트너이기도 하다. 또 북한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도 지닌다. 이 같은 북한의 양면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북한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이면서 동시에 북한을 알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북한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오게 되었다. 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동안 『국방일보』에 '이야기로 풀어 쓴 북한사'라는 이름으로 매주 연재했던 원고를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통일의 파트너이자, 여전히 긴장과 대립 속에 공존하고 있는 북한. 우리는 북한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재인식하며, 나아가 희망의 통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승자의 생각법 - 무엇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가

도널드 트럼프 | 시리우스 | 20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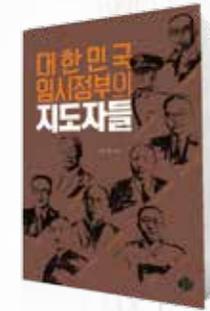
2016년 최대의 이변은 역시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미국민들을 포함한 세계 많은 이들은 과연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려와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분단된 현실 속에서 통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동맹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미래에 더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책은 트럼프 자신이 겪은 최대의 도전들과 가장 힘들었던 싸움들, 수많은 역경을 성공으로 전환시킨 방식을 털어 놓고 있다. 그는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주문을 외우며 지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책은 성공의 상징이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반전의 인물, 트럼프의 생각 방식을 담았다. 특히, 거침없는 그의 직설화법이 유머로 표현되어 있어 읽는 이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이 책의 장점은 그가 사업을 하며 겪은 실제 사건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트럼프식 조언으로 각 사건에 그만의 명쾌한 답을 실었다. 이 책을 통해 그의 생각법을 읽는다면 향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올 그의 행보를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살구꽃 필 무렵

박상재, 양세훈 저 | 나한기획 | 2016. 10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매체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상호소통을 도모하고자 제작된 신개념 동화 시리즈다. 산기슭 속 살구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파란 지붕아래, 갓난쟁이 상구는 엄마 아빠 품에서 한없이 행복하지만 하다. 하지만 상구가족의 행복한 나날도 잠시, 6.25 전쟁이 터지며 상구아빠는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상구엄마,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어느새 훌쩍 커버린 상구. 이들에게 지나간 세월은 아픈 기억과 상처로만 남는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새 백발 할머니가 된 상구엄마에게 날아온 반가운 소식, 이들 가족은 오랜 기다림과 아픔을 넘어 다시 하나 될 수 있을까?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 갈등, 상처, 죽음. 그 고통을 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6.25전쟁의 상처는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2015년에 이루어진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신 이들이 6만 6천여 명이다. 지금까지도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때임을 책은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한시준 | 역사공간 | 2016. 11

책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구해온 저자 한시준의 연구성과를 묶은 것이다. 이 책의 키워드는 '역사의 정의'이다. 저자는 '정의'를 "돌아갈 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건설현장에서 하루 종일 노동한 사람이 저녁에 노동한 대가로 일당을 받는 것이 정의이고, 힘 있는 깡패나 머리 좋은 사람이 일당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낸 가장 큰 이유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온 재산과 목숨을 바쳐가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사람보다, 개인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하였던 반민족 행위자가 높게 평가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1부에서는 임시정부의 기반을 마련한 홍진과 안창호를, 제2부에서는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을 지낸 이승만·박은식·홍진·김구를, 제3부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이론가로 역할한 조소앙과 신익희를, 제4부에서는 한국광복군에서 총사령관으로 활동한 이청천·황학수를 다루었다. 여전히 역사는쟁이 뜨거운 지금, 정의로운 역사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민화협 사서함

2016 November / December
Vol.83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3호의 정답은 '민족화해상'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민화협 사서함은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의 우표 중, 아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계순희 선수를 '유술 우승자'로 소개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유도를 유술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유도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북한은 스포츠 용어를 수용함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한 우리말 용어로 재창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말 연구를 하는 관계자들이 본받을 정신입니다.

김철희 충남 홍성군

모든 글이 두루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염수정 추기경님의 인터뷰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요즘 언론 매체에서는 북핵이라는 비대칭전력에 맞서 우리의 비대칭전력을 극대화하자는데, 추기경님 인터뷰를 통해 진정으로 남북 주민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아닌, 평화의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뷰 기사를 통해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민족화해가 급선무라 생각되었습니다.

강영숙 인천시 부평구

'북한주민 인권과 장기적 남북관계 위한 선별적 인도적 지원 고려해야'를 읽고 우리의 대북정책은 세계의 여건을 고려하고 북한의 대남정책과 맞물려 있어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발전적, 진취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만 탓하며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해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느낍니다. 특히 수해나 재난 피해를 당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하여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함을 명심해야 하리라 봅니다.

우정렬 부산시 북구

'기회 - 남북주민들은 서로를 어떻게 볼까'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남이 보는 북한사람과 북이 보는 남한사람에 대해 정확한 현 실태와 상황인식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북한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이해 확충이야말로 남북화해에 있어서 굳건한 다리 역할을 하는 자양분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남북관계에 있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쪼록 남과 북이 서로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화합의 창구가 하루빨리 복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익타산에 맞춘 차가운 통일이 아닌 민족화해협력에 의한 따뜻한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영민 경기도 의정부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통해 '청년, 통일과 한반도를 말하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극한 대립 양상인 때에, 우리 청년들이 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스펙과 취업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다양한 균형감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김경순 경남 하동군

고구려 고분벽화

TOMB MURALS
IN GOGURYEO



2016. 12. 29. * — 2017. 02. 26. †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시실

초청강연

- 01. 19(목) | 14:00 전호태(울산대학교) | 고구려 고분벽화, 오늘날 그리 내일을 말한다
- 01. 24(화) | 14:00 김현숙(동국대학교) | 벽화고분 구조로 본 고구려 사람들의 시후관념
- 02. 02(목) | 14:00 최종택(고려대학교) | 고구려 벽화고분 모형을 통해 본 남북교류사업
- 02. 09(목) | 14:00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